

# 2024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2024  
Compliance  
Program

# Index

<b>PART 1.</b>		
<b>임직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 가이드</b>	1. 기본원칙	2
	2.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점검 지침	3
	3. 하도급법 자율준수를 위한 점검 지침	5
	4.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점검 지침	6
	5. 대리점법 자율준수를 위한 점검 지침	6
	6. 약관규제법 자율준수를 위한 점검 지침	7
	7. 당사 적용 주요 공정거래 법규	8
<b>PART 2.</b>		
<b>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b>	1. CP의 개요	9
	2. CP 핵심 8대 요소	10
	3. 당사의 CP 안내	11
	4. 공정거래위원회 소개	14
<b>PART 3.</b>		
<b>공정거래법 해설</b>	1. 공정거래법 개관	18
	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19
	3.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25
	4. 부당지원행위	36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	48
<b>PART 4.</b>		
<b>하도급법 해설</b>	1. 하도급법 개관	50
	2. 계약 체결 관련 사항	51
	3. 하도급대금 관련 사항	55
	4. 하도급계약 이행 관련 사항	62
	5.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66
	6. 기술탈취 금지	71
	7. 기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75
	8.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76
<b>PART 5.</b>		
<b>대리점법 해설</b>	1. 대리점법 개요	78
	2. 대리점법상 공급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79
	3. 주요 대리점법 위반 사례	80
	4. 대리점법 위반 시 제재	80
<b>PART 6.</b>		
<b>약관규제법 해설</b>	1. 약관규제법 개요	81
	2.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	81
	3. 약관해석의 원칙	82
	4. 불공정 약관	82
	5. 불공정 약관 주요 사례	87
	6. 위반 시 제재	88
<b>PART 7.</b>		
<b>공정거래 법규 위반과 개인의 책임</b>	1. 서설	89
	2. 개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	89
	3. 개인에 대한 민사적 책임	90

## PART 1.

# 임직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 가이드

### 1. 기본원칙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와이케이스틸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이하 "CP 운영규정") 제10조를 준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여야 함

#### ■ 와이케이스틸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0조 (임직원의 의무)

1.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법규 및 CP 관련 사내 규정 등과 자율준수편람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별지 1]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여, CP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 법규 및 CP 관련 사내 규정 등 관련 위반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 또는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속하게 자율준수관리자, CP 전담부서 또는 법무 또는 감사 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전담부서에서 실시하는 CP 교육(이 규정의 위임에 따라 회사 내 다른 부서가 실시하는 CP 교육을 포함한다)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법규 등을 위반하는 내용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직원 이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거부하여야 하며,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의 이행을 강요받을 때에는 즉시 이를 CP 전담부서 또는 법무 담당 부서에 제보하여야 한다. 법무 담당 부서는 이와 같은 제보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CP 전담부서에 알려야 한다.
6.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준법 여부를 감독하고, 공정거래 법규 및 CP 관련 사내 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공정거래법<sup>1</sup> 자율준수를 위한 점검 지침

### 가. 부당한 공동행위 분야

#### ▣ 부당한 공동행위 자율점검 지침

-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 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 요구, 제공, 교환하지 않을 것
- 경쟁사로부터 가격이나 거래 조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이 불가능함을 밝히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둘 것
- 상대방 또는 모임, 교류회 등으로부터 담합 요청 또는 권유가 있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거절하고, 향후 해당 상대방 또는 모임 등의 접촉은 자제할 것
- 경쟁사 관련 정보는 적법하게 입수하여야 하며, 입수 경위와 출처를 명확하게 기록할 것
- 입찰에 참여하려 하는 경우, 실적, 대상, 물건 등에 관한 수주예정사의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입찰 참가가 예상되는 다른 사업자와 교환하지 말 것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 수량, 비율 등을 결정하지 말 것
- 입찰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이나 동향에 관한 정보를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 정보교환을 하거나, 동종업체 간 정보 수집 또는 제공, 정보교환 촉진 불가
- 동일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의 입찰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전달해 주지 말 것
- 당사가 낙찰받은 사업 건과 관련하여, 해당 입찰에 참여하였던 다른 사업자를 당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크므로 지양. 단, 반드시 해당 업체 소싱이 필요한 경우는 법무부서 검토를 거친 후 해당 사업 건 발주자로부터 서면 승낙을 받을 것
- 둘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
- 입찰 관련 회사 내부 자료, 이메일 등에 담합 사실이 없음에도 외부에서 오해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업체 사전 협의 완료, 협력 또는 협조 강화, 당사 지원 예정 등)
- 다른 사업자와 합의·협의 등을 통해 입찰가격을 정하는 행위, 낙찰 예정자 또는 수주 물량을 결정하는 행위는 절대로 불가함을 명심할 것

### 나.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분야

#### ▣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자율점검 지침

- 당사와 거래를 원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거래 개시에 대한 대가로서 해당 거래와 무관한 부당행위(당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물품, 용역을 의무 구입, 금품 또는 향응의 제공 요구 등)를 요구하지 말 것
- 상기 부당행위 요구에 업체가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거래 개시를 거절하지 말 것
- 거래 대상 업체의 선정 또는 거래 거절은 반드시 회사 내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 동일한 상품·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계열 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 조건을 설정하지 말 것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만을 거래 조건, 서비스 내용 등을 차별하여 거래하지 말 것
- 고객이 당사 서비스, 제품 등을 구입·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고객 또는 고객 담당자에 불법적 금품 또는 향응(리베이트)을 제공하지 말 것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고객에게 제공하는 당사 서비스, 제품 관련 정보는 항상 진실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하고,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여서는 아니 됨
- 고객이 당사와 거래하게 하기 위하여 경쟁사 사업 활동을 방해·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당사 용역,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불필요한 기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도록 하지 말 것(끼워팔기 금지)
- 협력업체 거래 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업체가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업체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빌미로 거래 물량 축소, 협력업체 탈락 등의 불이익을 주지 말 것
- 특정 사업을 위하여 경쟁자 핵심 인력을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빼오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계약조건(업체 귀책 시 계약 금액 무조건 전액 환수 등)을 설정하지 말 것
- 업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그 내용, 품목,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당사의 지도를 받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를 하지 말 것
- 당사의 제품, 서비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지역이나 상대방에 한하여 거래하지 말 것
- 사업 수행 시 거래 상대방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
- 당사와의 기존 거래 관계를 종료하고 거래처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려고 하는 업체에게 정당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존 재고를 일방적으로 전량 반품 또는 담보·보증보험 등을 해제, 반환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처 이전을 방해하지 말 것
- 업체가 당사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경쟁 사업자의 물품 등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주지 말 것
- 업체의 당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이유로 해당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지 말 것

## 다. 부당지원행위 분야

### ▣ 부당지원행위 자율점검 지침

- 공정거래법상 '일반 부당지원행위(상당한 규모·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행세 거래)' 금지규정은 당사와 계열사 간 거래뿐만 아니라, 당사와 비계열사 간 거래에도 적용되는 규정임을 명심할 것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는 그러한 부당지원을 받은 회사, 부당지원을 한 회사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할 것.
- 계열사인 고객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업무를 그에 대한 대가 지급 없이 수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알린 후 추가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변경계약 체결 후 이를 수행할 것
- 역할이 없는 회사(계열사, 비계열사 포함)를 거래 단계에 추가시키거나, 그 역할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지 말 것
- 특별한 역할 없이 거래 단계에 끼어드는 행위, 역할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계열사와의 거래라 하여 상호 체결한 계약 내용상의 상대방 책임을 면제하는 행위, 계약 대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또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계열사 간 거래 시에도 상호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할 것

## 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분야

###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자율점검 지침

-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규정은 거래 상대방의 최저가격을 지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행위에도 적용되는 규정임을 명심할 것
-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규정은 거래 상대방의 가격을 지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다음 거래단계 사업자의 가격을 지정하는 행위에도 적용되는 규정임을 명심할 것
- 지정한 가격 범위를 지키지 않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공급중단 등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지원금 등의 지급을 중단하는 소극적 불이익 제공이나 가격 미준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할 것

## 3. 하도급법<sup>2</sup> 자율준수를 위한 점검 지침

### ▣ 하도급법 위반 행위 자율점검 지침

-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당사와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대금 지급, 보복행위 금지 등 일부 규정은 당사/중견기업 간 거래에도 적용된다는 점 유의
- 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무부서에 문의하여 확인받을 것
- 하도급계약이 체결 완료되기 전에는 절대로 업체에 업무를 지시하지 말 것
- 공정위 표준 계약서가 아닌 양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 대해 반드시 법무부서 사전 검토를 거쳐 하도급법 위반 소지(부당특약 등)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
- 하도급 거래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도 조정할 것
- 선금금 및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법상 규정에 맞게 지급할 것(15일·60일 이내, 현금비율 유지)
-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기한 초과 시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즉시 보고 후 업체에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가 납품한 물건·용역 등의 수령·검수 요청을 거절·반품하지 말고, 거절 등에 대한 정당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문, 검수 미통과 사유서 등으로 명확하게 증빙을 남길 것
- 당초 정한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거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합의서 등 서면으로 그 상세 내용을 업체에 알리고, 그로 인해 업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것
- 부당하게 업체에 금전, 물품, 용역 등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말 것
- 기술 자료는 회사 내 기술 자료 요구 프로세스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서를 발급하여 요구할 것
- 업체로부터 수령한 기술 자료는 해당 요구서, 비밀유지 계약 내용에 따라 유용·유출하지 말 것
- 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하도급법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에 응할 것
- 당해 거래와 관련한 업무 연락을 하는 것 외에 부당하게 업체 경영에 간섭하지 말 것
- 하도급법상 예외 사유(그 특성상 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업무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 결과는 10일 이내에 통지할 것

2.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4.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점검 지침

### ▣ 영업비밀 보호 및 침해 예방 자율점검 지침

- 타사 영업비밀로 의심되는 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하지 말 것
- 수령한 타사 자료를 NDA 등에 따른 공유·사용 권한 확인 없이 사내에 공유하지 말 것
- 사내 보고 시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타사 중요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 타사 자료를 수집, 사용, 폐기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사안이 존재할 경우 이를 개인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무, 보안부서 등 유관부서와 협의할 것
- 타사 영업비밀이 유입된 정황 발견 시 상대방에게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답변하는 등 부서별 독자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무, 보안부서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이에 대응할 것
- 경쟁업체 영업비밀을 취득할 의도로 경쟁업체에서 전직한 인력을 통해 그 인력의 기존 팀원 채용을 유인하지 말 것
- 경쟁업체 직원 상당수에 대해 동시에 전직할 것을 권유·유도하지 말 것
- 경력직 사원에게 종전 근무 회사로부터 습득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 등 종전 회사의 영업비밀자료를 당사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말 것
- 경력직 사원이 종전 회사로부터 습득한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물품(PC, 저장매체 등)은 회사 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할 것
- 상호 간에 NDA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제3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구하지 말 것
- 업무 편의를 위하여 중요 정보·자료를 취급하는 임직원에게 필요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거나, 정보 등의 취급 인력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지 말 것
- 신규로 생성되거나 취득한 정보·자료를 회사 규정에 따른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
- 직원 퇴사 시 반드시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회사 내부 검증 절차를 거칠 것 (PC·정보매체 반납 확인, 중요 자료 반납·폐기 확인 등)

## 5. 대리점법<sup>3</sup> 자율준수를 위한 점검 지침

### ▣ 대리점법 자율점검 지침

- 대리점과의 거래가 명칭과 관계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에 해당하여 대리점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것
- 대리점에 경영정보 제공, 점포 환경 개선, 임직원 임면 등 대리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에는 대리점법상 경영활동 간섭 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자제할 것
- 대리점과의 사전 협의 없이 매출, 판매촉진 행사 계획을 시달하거나 물량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점에 적극적으로 판매촉진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만 아니라 당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경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경우도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할 것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6. 약관규제법<sup>4</sup> 자율준수를 위한 점검 지침

### ▣ 약관규제법 자율점검 지침

-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 상대방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거래형태 등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을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자사의 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자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을 계약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계약상대방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지나치게 초과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상당한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 계약상대방이 법률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방이 자사에게 유리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불이익을 제공하는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소 제기 등 재판상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7. 당사 적용 주요 공정거래 법규

법령	주요 내용	관련 부서
공정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li> <li>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li> <li>부당지원행위 금지</li> <li>부당 기업결합의 제한</li> <li>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li> </ul>	전 부서
하도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li> <li>부당한 특약의 금지</li> <li>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li> <li>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li> <li>선금금의 지급</li> <li>내국신용장의 개설</li> <li>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li> <li>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li> <li>부당반품의 금지</li> <li>감액금지</li> <li>물품구매 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의 금지</li> <li>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li> <li>기술 자료는 제공 요구 금지 등</li> <li>하도급대금의 지급 등</li> <li>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li> <li>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li> <li>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li> <li>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li> <li>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li> <li>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li> <li>보복 조치의 금지</li> <li>탈법행위의 금지</li> </ul>	구매 및 영업 부서 그 외, 하도급 업체 거래·협업하는 전 부서
영업비밀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비밀 침해 금지</li> </ul>	전 부서
약관규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관의 명시 설명</li> <li>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금지</li> <li>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금지</li> <li>고객의 계약상 본질적 권리 제한 조항 금지</li> <li>면책조항 금지</li> <li>부당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 금지</li> <li>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li> <li>계약의 해제·해지권 제한 금지</li> <li>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급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금지</li> <li>의사표시 의제 조항 금지</li> </ul>	전 부서
대리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서 작성 의무</li> <li>구입 강제 금지</li> <li>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금지</li> <li>판매 목표 강제 금지</li> <li>불이익 제공 금지</li> <li>경영활동 간섭 금지</li> <li>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회피 금지</li> </ul>	판매 부서 등

## PART 2.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 1. CP의 개요

#### 가. CP(Compliance Program)이란?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 준법 시스템

#### 나. CP의 의의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짐

##### ①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행동 기준 제시

-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행동 기준을 제시
- 준법의식을 기업문화로 체화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조기 발견하고 자진 시정할 기회를 제공
- 동일한 법 위반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 기반 제공

##### ②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 미국·일본·유럽 등 경제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CP를 도입하여 운영 중
- 이러한 선진국들은 CP를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재판 시 양형기준에 포함
- 우리나라도 기업 경제활동의 핵심 요소로 CP를 요구하고 있음

##### ③ CP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우리나라는 2001년 민간 주도로 CP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
- CP 운영 기업들에 CP 등급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2023년 공정거래법 개정)

## 2. CP 핵심 8대 요소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8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가.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나.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다.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이하 '이사회')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 라.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 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CP 기준·절차, 공정거래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경영자, 구매·영업 부서 등 공정거래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바. 내부감시 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 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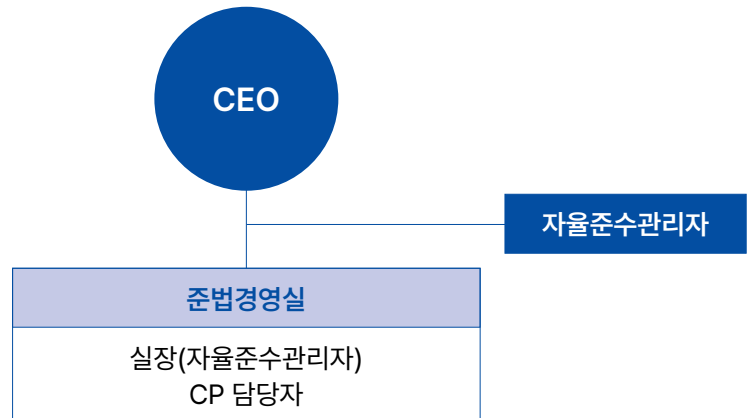
### 아.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당사의 CP 안내

#### 가. 당사 CP 조직

##### ① CP 조직도



##### ② 준법경영실 연락처

김영태(준법경영실장, 자율준수관리자)  
ytkim@yksteel.co.kr

김자경  
Kimjk@yksteel.co.kr

#### 나. 당사의 주요 CP 제도

##### ① CP 운영규정

» 회사 CP 전반에 대한 근본 규정으로, 당사 CP 운영은 회사 규정인 CP 운영규정'을 근본으로 하여 이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짐. 모든 임직원은 CP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근거한 회사 CP 활동 전반에 적극 참여·협조하여야 함

##### ▣ 와이케이스틸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 회사 내 CP 운영 조직의 지정(자율준수관리자, CP 전담부서 등)
- CP 운영 조직별 권한과 책임
-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 임직원의 준법 및 CP 준수 의무
- 최고경영자의 CP 실천 및 준법경영 의지의 표명
- CP 운영 현황 및 성과의 검토, 점검·보고
- 사전업무협의 제도
- CP 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교육계획, 내용, 강사 기준 등)
- 자율준수편람에 관한 사항
- 공정거래 관련 제보, 징계, 포상에 관한 사항
- 기준의 개정 주기에 관한 사항 등

## ② 사전업무협의 제도

» 사전업무협의 제도는 CP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일정한 사항, 특히 공정거래법 등 현행법령 위반 리스크 상존하는 판매·영업활동 등에 대하여는 CP 주관 부서 등 유관 부서의 협의를 미리 거친 후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 CP 운영규정 제14조 (사전업무협의 제도)

- ① 회사는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업무협의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사전업무협의 제도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법무, 재무, 기획부서 등 공정거래 법규 준수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이 주관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사전업무협의 제도의 구축 및 운영, 사전업무협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 법규 위반행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제정·시행하는 규정에 따른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사전업무협의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회사 임직원의 공정거래 법규 위반행위를 연 1회 이상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직접 보고 체계

»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그 업무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회사 CP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대표이사·이사회 등 최고경영진에게 독립적으로 직접 보고할 권한을 가짐

### ■ CP 운영규정 제9조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의 독립성)

- ① 회사 및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 소속 임직원이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체의 부당한 지시 내지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 및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대하여 CP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보고할 권한을 갖는다.
- ③ 전항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최고경영자 및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내용에는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포함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 소속 임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어떠한 부당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⑤ 회사 및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 소속 임직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당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게 될 위험이 있을 경우,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을 즉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 자율준수관리자 소속 부서를 최고경영자 직속 부서로 독립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위 규정 외에 실질적으로 독립성 및 직접 보고 체계를 확립·확보할 수 있도록 함

#### ④ CP 관련 교육

- » 회사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준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확정된 내용은 공지 예정

##### ■ 와이케이스틸 준법 교육 프로그램

- 전사 기본교육
  - 공정거래법 준법 교육 : 공정거래법 기본개념 이해 및 기본지식 습득
  - CP 기준 및 절차 : 컴플라이언스 기본 개념 이해
- 계층별 교육
  - 신규, 경력 입사자 대상 교육
  - 법 위반 임직원, 교육 미이수자 대상 교육
  - 부서장 대상 교육
  - 임원 대상 교육
- 부문별 교육
  - 영업·구매부서 대상 교육
  - 생산부서 대상 교육

#### ⑤ 내부고발시스템

- » 전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내부고발 제도를 통해 제한 없이 상시 제보할 수 있음

##### ■ 내부고발 대상

-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
  - 임직원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 지시나 참여, 이를 묵인하는 행위
  - 임직원 이중 취업 사례, 공금횡령 및 수뢰 사실 및 부당한 업무 처리
  - 기타 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 및 회사의 규정 위반행위
  - 금품, 접대 요구나 제공 사실, 성희롱에 따른 풍기 문란 사례
  - 기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
- »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조사·처리됨

#### ⑥ 법규 위반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 » 공정거래 법규 위반 임직원은 회사 인사규정상의 제재 규정의 절차·내용에 따라 제재

## 4. 공정거래 위원회 소개

### 가. 설립 목적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 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 및 소비자 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고 있음.

### 나. 주요 기능

#### ① 경쟁촉진

- »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
-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
- »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

#### ② 소비자 주권 확립

-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 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
- »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
- »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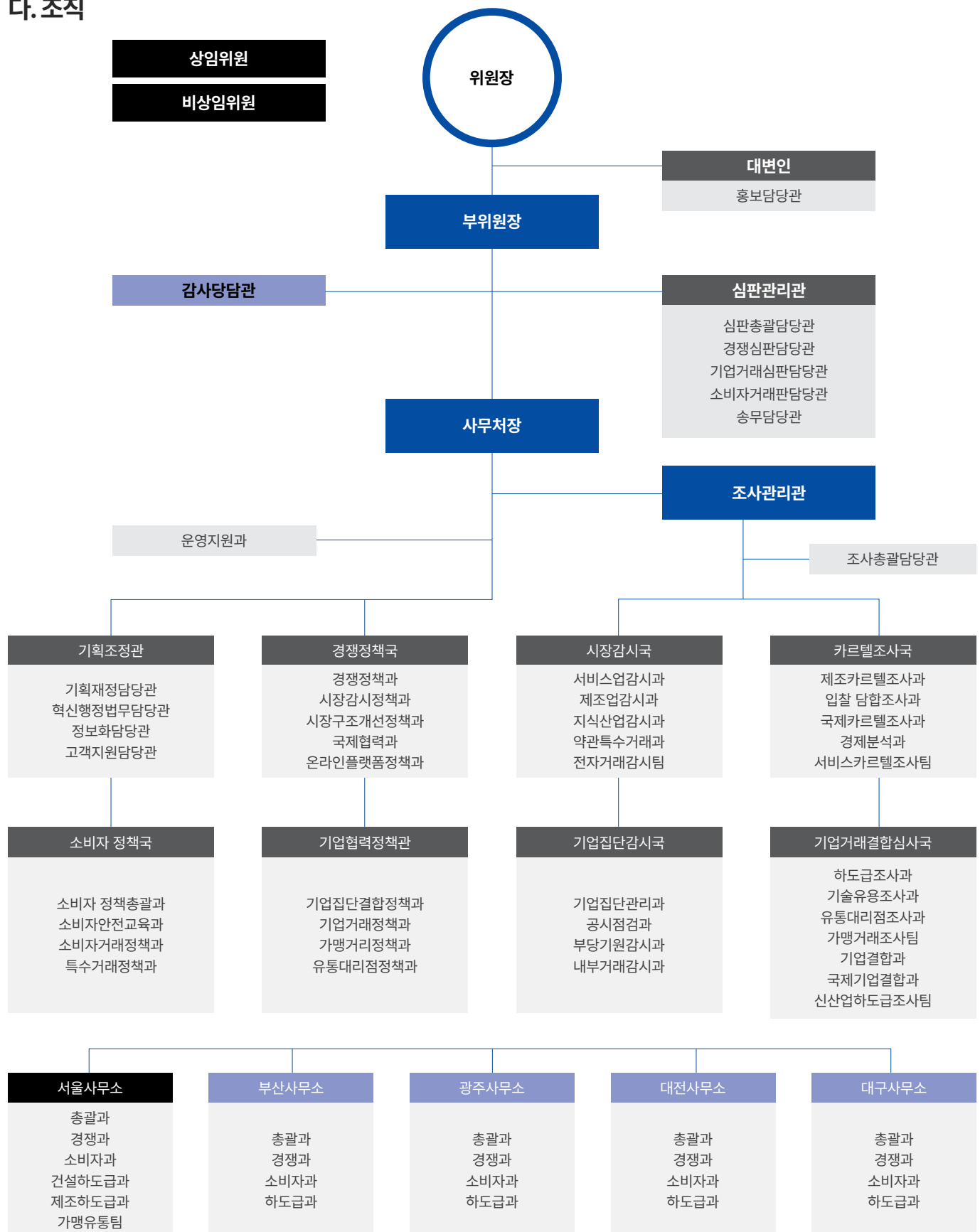
#### ③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 » 하도급대금 지급, 물품 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대기업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
- »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 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

#### ④ 경제력 집중 억제

- »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 체제의 문제점을 시정

## 다. 조직





## 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법률명	기본 개념
공정거래법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 및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하도급법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
약관규제법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
표시광고법 <sup>5</sup>	상품,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 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촉진
할부거래법 <sup>6</sup>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
방문판매법 <sup>7</sup>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 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전자상거래법 <sup>8</sup>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대규모유통업법 <sup>9</sup>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
가맹사업법 <sup>10</sup>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
대리점법 <sup>11</sup>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
소비자기본법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소비자 정책 종합적 추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
생협법 <sup>12</sup>	상부상조 정신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 복지·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 관련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 도모하고 국민 생활 안전 향상·국민경제 건전 발전의 이바지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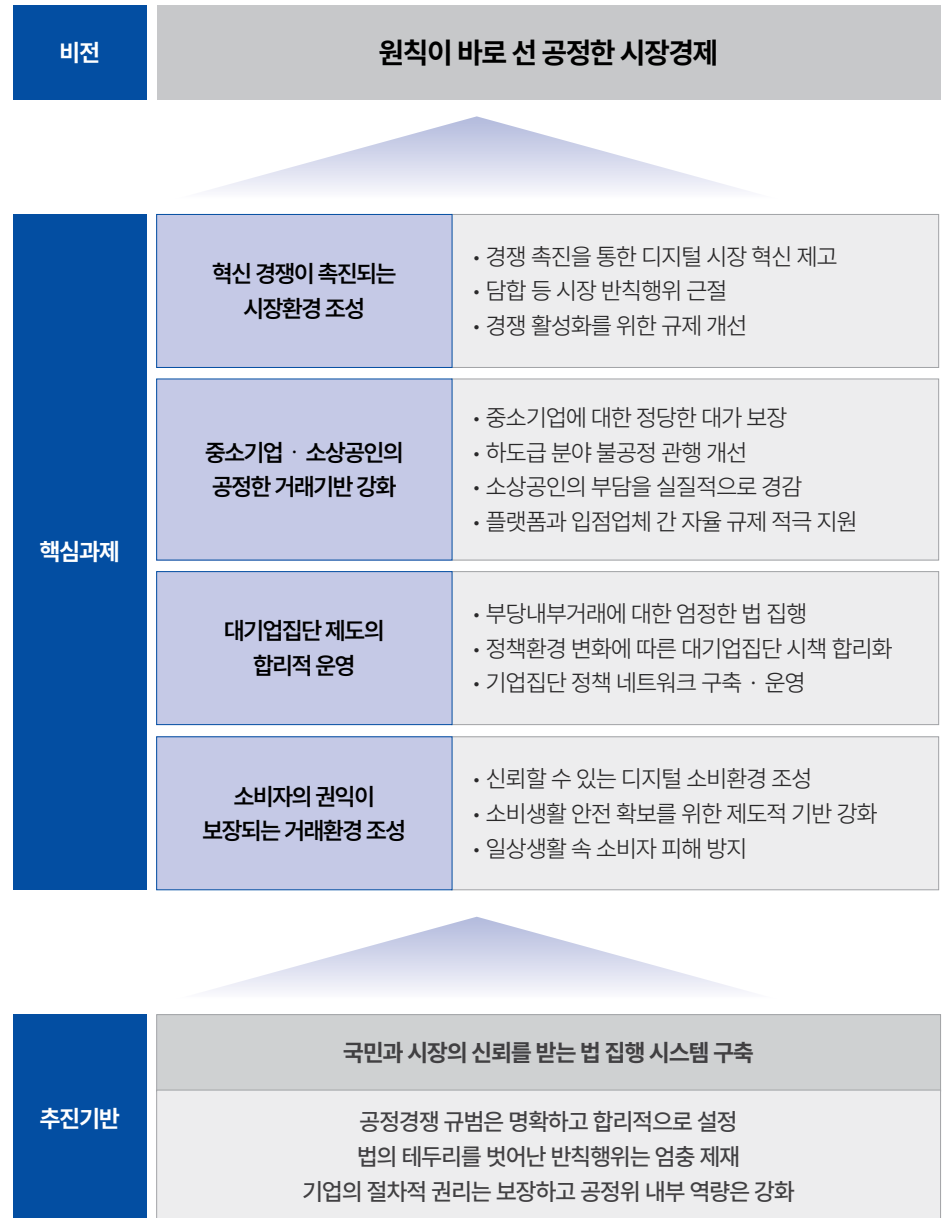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마.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추진 방향



## PART 3. 공정거래법 해설

### 1. 공정거래법 개관

#### 가. 공정거래법의 목적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나. 공정거래법의 구조

» 공정거래법은 '시장 구조'의 측면과 '거래 형태'의 측면에서 사업자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장구조를 규율한 예 : 법 제4조(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등),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 거래형태를 규율한 예: 법 제5조(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제한)

####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조사 및 심사 절차

1	사건인지	직권인지 또는 신고(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신고) 내용을 입력
2	조사	장부, 서류, 전산자료 등 조사, 진술 요구 등 조사방해시에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물리력 행사 시)
3	조사 후 조치	혐의가 없는 경우 : 심사관 전결로 종결 혐의가 있는 경우 : 심사 보고서 작성 후 위원회 상정
4	위원회 상정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여 상정 피심인에게 심사 보고서 송부 후 통상 2~3주의 의견 제출 기회 부여
5	위원회 심의 의결	일반인에게 공개, 피심인과 심사관이 상호 공방을 통해 사실관계를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20일 내 의결서 작성

**불복 시**  
- 의견서 송달일로부터 30일 내 이의 신청  
-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

##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유형

- »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유형으로 재심사 명령, 심의 절차 종료, 무혐의, 종결 처리, 조사 등 중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이 존재
- »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조항 중 제124조와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 존재
  - 위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제기 가능
  -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위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의무 고발하여야 함
  - 검찰총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을 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 »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사업자단체는 해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 부당공동행위, 보복 조치 등 특정 규정 위반 시 실손해의 3배 미만 범위 내 손해배상 책임 부담

## 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가. 개관

- »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물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거래 지역 등을 제한하는 것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카르텔(Cartel) 또는 담합 등의 명칭으로 알려짐
- » 금지되는 행위 유형은 공정거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음
  - 가격결정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거래 조건 결정 : 상품·용역의 거래 조건, 대금 지급조건의 결정
  - 생산·출고 등 제한 : 상품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용역 거래 제한
  - 거래제한 :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의 제한
  - 시설투자 제한 :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 장비의 도입을 방해·제한
  - 상품 제한 : 상품의 생산이나 거래 시 상품의 종류, 규격의 제한
  - 입찰 담합 : 입찰 또는 경매할 때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경락 가격,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
  - 타사업자 방해 :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사업내용을 방해 또는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 정보교환 : 가격, 생산량,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 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 나. '합의'의 의미 및 실행행위

### ① 사업자 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 » 합의는 구두합의와 서면합의가 모두 포함되며, 계약이나 협정 등 명시적인 합의는 물론 사업자 간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
- » 또한,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합의한 경우에도 다른 쪽 당사자는 당해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합의에 따를 것이라고 신뢰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제재될 수 있음

### ② 합의의 추정(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

- » 해당 거래 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 횟수, 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거나, 담합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았음이 입증된 경우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함

####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 분야,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2.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 ■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의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직·간접적인 의사 연락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자 간 가격 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 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 수요공급 조건의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 원재료 구입 가격, 제조 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 당해 산업 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 거래의 빈도가 낮은 시장,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급자의 행위 일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

### ③ 합의 추정의 반복

» 외형상 일치가 없었다는 점 또는 외형상 일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합의 추정의 전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추정을 반복 가능

#### □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 **단순 우연에 의한 일치**
  -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대해 사업자들이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의식적 병행 행위**
  -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대해 사업자들이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행정지도**
  - 행정기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경쟁 사업자와 동일한 행동을 한다는 인식이 없이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다만,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쟁 사업자와 합의하에 동일한 행동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행정지도에 의한 합의 추정 반복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서울고등법원 2017. 1. 26. 선고 2016누60678 판결 참조)

## 다.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Leniency 제도)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4조,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협조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 감경 및 면제 대상

- **자진 신고자**: 과징금 및 시정조치 면제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아래 4가지 조건 만족 필요)
    - A.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 B.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 C.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 D.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했을 것
- **조사 협조자**: 시정조치 감경 또는 면제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 협조한 자(아래 2가지 조건 만족 필요)
    - A.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 B. 위 자진 신고자 조건의 A, C, D를 충족할 것
- **기타 자진 신고자 또는 조사 협조자**: 과징금 50% 및 시정조치 감경
  - 공정위 조사 전 자진 신고자 또는 조사 시작 후 조사 협조자(아래 2가지 조건 만족 필요)
    - A.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 B. 위 자진신고자 조건의 C, D를 충족할 것

## 라. 부당 공동행위 금지규정 위반 시의 제재

### ① 시정명령

---

- »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 일반적으로는 합의의 파기를 명령

### ② 과징금

---

- »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그 사업자가 위반 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한 관련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20%의 과징금을 부과
-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 ③ 형사처벌

---

-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이를 행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 공정위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④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 » 부당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
- » 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 ⑤ 공공입찰 참가 제한

---

-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 »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 내용 등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개월

## 마. 부당공동행위 사례

### 6개 제강사의 민수철근 담합 사건 (공정위 의결일 2018. 12. 20.)

#### ▶ 행위 사실

- 중국산 철근 수입량 증가, 원재료 가격 하락 및 이로 인한 수요처의 가격 인상 반대 등으로 철근 시세가 낮게 형성되자, 6개 제강사들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12차례의 월별 합의를 통해 각 월의 직판량 또는 유통량 물량의 할인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음
-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 폭이 축소되는 등 합의 내용이 실제 실행되어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미침
- 제강사들은 합의 실행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합의 효과가 악화되면 재합의 및 실행을 반복하여 담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음

#### ▶ 제재

-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 과징금 총 1,143억 1,700만 원
- 5개 제강사 고발

###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담합 사건 (공정위 의결일 2021. 1. 18.)

#### ▶ 행위 사실

- 7개 제강사는 2010년~2018년(약 8년) 기간 동안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의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 및 그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
- 이러한 합의는 이들 제강사의 공장 소재지(영남권/경인권)별 구매팀장 모임(총 155회, 영남권 120회, 경인권 35회)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중요 정보(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 변동 계획, 재공량 입고량, 수입 계획 등 기준 가격 결정에 중요한 정보) 교환을 통해 이루어짐

#### ▶ 제재

-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정보교환 금지 명령, 교육 명령)
- 과징금 총 3,000억 8,300만 원
- 4개 제강사 고발

### 11개 제강사의 관수철근 담합 사건 (공정위 의결일 2022. 11. 8.)

#### ▶ 행위 사실

- 희망수량 경쟁방식으로 실시되는 조달청의 입찰에 참가한 제강사들은 입찰공고 이후 입찰담당자 모임을 통해 낙찰 물량 배분을 협의하고, 가격자료 제출일에 낙찰 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하였으며, 입찰 당일 최종 결정된 각 업체별 배분 물량·투찰가격 등을 점검하였음
-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제강사들은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였음

#### ▶ 제재

-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 과징금 총 2,565억 원
- 7개 제강사 및 소속 직원 22명 고발 (최초 9명 고발 이후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추가 고발)



## 바. 부당공동행위 FAQ

### Question

업체 관계자들끼리 가격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가격 수준에 대한 의사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가격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되나요?

-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합의는 계약·협정·동의서 등의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
- 예로, 렌터카 업체들이 공식 위원회에 참석하여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수 개의 회사가 모두 본인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를 통해 조합의 대여요금 참고안이 결정되었으며, 렌터카 업체들이 이에 따라 대여 요금을 신고한 사안에서, 업체들이 순차적 의사 연락에 따라 일정 지역의 차종별 자동차 대여요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암묵적인 양해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음 (서울고법 2016.10.7. 선고 2014누70442 판결)
- 위 사례와 같이 법원은 암묵적으로 양해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가격 의사 교환 행위 자체가 암묵적 가격 합의 등으로 비춰질 소지 존재 (공식 회의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 Question

합리적 제품 구매를 위하여 다른 회사들과 구매가격을 합의하려는 경우와 같이, 실제 수요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 담합이 성립하나요?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부당 공동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에 있음
- 따라서, 공급자들이 아닌 수요자들이 물품 구매가격을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당해 제품 분야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 할 것임

### Question

관급 입찰에서 조달청 등 입찰 주체가 입찰 전에 사업자별로 물량을 배분하거나 사업자별 투찰 수량을 지시하여, 그에 따라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입찰 담합이 성립하나요?

- 舊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었으나, 그 범위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 왔음(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116조는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여 그 범위가 더욱 축소되었음.
- 따라서 입찰 주체 등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찰 담합이 성립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거 용역 입찰을 실시하면서 사업자별로 권역을 나누어 입찰에 참가할 것을 지시한 사안에서도, 행정지도에 의한 행위였다는 사업자의 항변을 배척하고 그 위법성을 인정하여 제제한 바 있음(공정거래위원회 2023. 1. 19. 의결 제2023-006호 서울시 마포구청 발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Question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기술 향상 및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어 다 같이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눈 후 사업운영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공정거래법은 부당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경우에만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이를 허용하고 있음.
  - 산업구조 조정: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로 특정 산업의 공급 능력이 현저하게 과잉 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및 생산방법의 낙후로 생산효율 및 국제경쟁력 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등(공정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1호)
  - 연구·기술 개발: 당해 연구·기술 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소요 투자 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공정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 거래 조건의 합리화: 거래 조건의 합리화로 생산 능력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의 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등(공정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3호)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기술 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 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등(공정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4호)
- 공정거래법에 제40조 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또는 변경)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46조(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증을 교부받으면 됨

## 3.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 가. 개관

» 불공정거래행위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

#### ▣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9호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이른바 '부당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통행세)'로, 일반적으로 다른 불공정 행위(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와는 구분하여 판단

## 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의 의미

-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를 “부당하게”와 같은 의미로 해석
- » 구체적으로는 해당 행위로 인해 시장경쟁 정도 또는 경쟁 사업자 수가 유의미한 정도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거나(경쟁 제한성), 경쟁 수단 또는 거래 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함(불공정성)을 포함

##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 » ‘공정거래 저해성’(법 제45조 제1항 본문), ‘부당성’(법 제45 제1항 각호)이 위법성 판단 기준
- » 공정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 저해성을 경쟁 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음

경쟁 제한성과 불공정성	
경쟁 제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 사업자(잠재적 경쟁 사업자 포함)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li> <li>▪ 또는 경쟁 사업자 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li> </ul>
불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 수단 또는 거래 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li> <li>▪ 경쟁 수단의 불공정성은 상품,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 수단의 사용으로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li> <li>▪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은 거래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여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li> </ul>

## 나.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1) : 거래 거절

거래 거절의 유형	
공동의 거래 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li> </ul>
단독 거래 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가 단독으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 상품·용역 수량,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li> </ul>

## ① 위법성 판단기준

- ① 거래 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 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 ② 거래 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가 사업 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 ③ 거래 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 부당한 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거래 거절한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② 위반 유형

- » 공급·구입 거절,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실상 거절, 거래수량이나 내용의 현저한 제한 등
- » 부품 제조업자가 완제품제조업자에게 부품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 » 자기가 지정하는 거래처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재고부족이나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예상되어 거래 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 거래 거절에도 대체 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 사전에 사업 영위에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거래 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 다.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2) : 차별적 취급

### 정의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 내용으로 거래하여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것

### ① 가격·거래 조건 차별의 예시

- »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구입량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특정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는 더 높은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 »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 면에서 현저히 우대하는 경우
- » 경쟁 사업자에 대한 제품 공급 비중에 따라 지급 기간이나 현금 지급 비율 등을 현저히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 ②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예시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타 회사에 견적 단가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
- »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사의 결제조건(현금비율, 어음 만기일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경우
- »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계열사의 경쟁 사업자에게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 조건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라.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3) : 경쟁 사업자 배제

### 정의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등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경쟁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 등의 상당량을 고가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

### ① 부당 염매

- »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제조회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공기관 구매 입찰에서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되어 다년간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 ② 부당한 고가 매입

- » 합리적 이유 없이 제품 생산 등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수하여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정도로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③ 위법성 판단 기준

- »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며, 당해 염매행위의 의도, 목적, 염가의 정도, 행위자의 사업 규모 및 시장에서의 지위 염매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 » '계속 거래상의 부당 염매'는 사업자가 채산성이 없는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그 행위의 외형상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아야 함
- » '기타 거래상의 부당 염매'는 그 행위 태양이 단순히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공정 거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것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공정 거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 마.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4) : 부당한 고객 유인

#### 정의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 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

### ① 위법행위 유형

- » 자신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거래 상대방인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과다접대하는 행위
- » 자신과 경쟁 사업자의 영업 현황, 제품기능, 기술력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비교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수주하는 행위
- » 영업사원들이 경쟁 사업자의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 경쟁 사업자와 고객 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 사업자와 고객 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 바.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5) : 거래강제

### 정의

경쟁 사업자와 고객 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 사업자와 고객 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 ① 금지 행위 유형

- » 고가 기계나 장비 판매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끼워팔기)
- »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끼워팔기)
-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 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사원 판매)
- » 정상적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 사업자가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미달성할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 물량 축소, 협력업체 탈락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 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 사.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6) : 거래상 지위남용

### ① 거래상 지위 남용

- »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
- »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는 일방 사업자의 타방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경우를 의미
  - 통상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이와 더불어 당해 거래처에 대한 거래의존도, 당해거래처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처 변경 가능성, 사업 규모의 격차, 상품의 수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통상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은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남용'은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를 의미함

### ② 구입 강제

- »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을 입었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 강제가 있는 것으로 봄
- »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③ 이익 제공 강요

- » 거래 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경제상 이익은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
- » 계열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
- » 수요 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

### ④ 불이익한 거래 조건 설정·변경

- » 거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당초 설정하였거나 기존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
- » 거래 조건에는 각종의 구속 사항, 저가 매입 또는 고가 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 검사 방법, 계약 해지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
- »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한 경우
- » 협력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금 지급조건 등 거래 조건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 » 거래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 »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행위
- »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 지연, 해당 물품에 대한 검사 기간 등을 납품 기간에 포함시켜 거래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
- » 납품 지시 후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하는 행위
- » 협력사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 공급 물량을 감축하는 행위

### ⑤ 경영간섭

- » 임직원 선임·해임 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 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 » 협력사의 임직원 선임 등의 경우에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 » 협력사의 생산품목, 생산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

## 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7) : 구속조건부 거래

#### 정의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 경쟁 사업자는 잠재적 사업자를 포함하며, 독점 공급계약과 독점 판매 계약을 모두 포함
- » 경쟁자가 대체 거래선을 찾기 곤란한 상태에서 수요 측면에서 영향력 가진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에게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다수 거래 상대방과 업무 제휴 시 경쟁사와 중복 제휴를 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등

## 자.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8): 사업 활동 방해

### 정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술의 부당 이용, 인력 부당 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그 밖의 사업 방해 활동 네 가지 유형이 존재

### ① 기술의 부당 이용

- » 타 사업자의 기술의 부당 이용으로 타 사업자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방해하는 행위
  - 타 사업자는 경쟁 사업자로 국한되지 않고, 기술이란 특허법 등 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판매방법, 영업 관련 사항을 의미
- » 한편, '사업 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는지는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 상대방 감소 등으로 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 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

### ②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또는 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
  - 이때 타 사업자는 경쟁 사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부당성은 유인 및 채용 의도, 해당 인력의 사업 활동 차지 비중, 인력 유인·채용에 사용된 수단, 업계 관행 등이 고려
- » 한편, 사업 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는지는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 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 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
- » 다른 사업자의 핵심 인력 상당수에 대하여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여 스카우트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③ 거래처 이전 방해

- » 상대방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
- » 거래처 이전 의사를 밝힌 사업자에 대해 기존 구입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 처리하거나 담보 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여기서 사업 활동이 심히 방해되는지는 단순한 매출액 감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 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 감소, 거래 상대방 감소 등으로 사업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함

### ④ 그 밖의 사업 활동 방해

- » 위 행위 외, 자기 능력·효율성과 무관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 » 사업 영위에 필요한 특정 시설을 다른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전달, 살포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함



## 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 ① 시정명령

-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정위는 당해 행위의 중지, 계약 조항의 삭제, 시정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② 과징금

-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위반 기간 동안의 관련 매출액 4% 한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 시는 10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부당지원은 별도 기준 적용)

### ③ 형사처벌

-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공정위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단,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 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과 함께 처벌되는 양벌규정이 적용
- »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 제기 가능

### ④ 손해배상책임

-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
- » 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와 관련하여 보복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손해의 3배 미만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 » 또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 카.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 2개사의 심장 사상충 예방제 거래 거절 사건(2017. 1. 25.)

#### ❶ 행위 사실 -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기타의 거래 거절)

- 한국조에티스(주), (주)벨벳은 현행 제도상 동물약국에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가 가능한 있는 심장 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 공급하는 것을 거부함과 동시에,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도 철저히 적발·차단함
- 이러한 약품 공급의 차단은 해당 약품이 싸게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음
  -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심장 사상충 예방제를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 동물병원들은 동물약국과의 경쟁 압력에서 벗어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었음

#### ❷ 제재

-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 DVM 회원 수의사들의 구속조건부 거래 사건(2017. 1. 25.)

##### ❶ 행위 사실 -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구속조건부 거래)

- 위 거래 거절 사건 관련, 수의사 인터넷 카페 (DVM) 회원 수의사들은 주요 제약사 판매업체 상대로 심장 사상충 예방제를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동물약국으로 공급하지 말 것을 강제
  - 약품 공동구매, 불매운동 추진 등을 빌미로 제약사 등을 압박
  - 이에 제약사 등은 더욱 동물병원에의 공급 거절 정책을 철저히 시행할 수밖에 없었음

##### ❷ 제재

-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공표 명령)

#### 울산 향운노조의 경쟁노조 사업 활동 방해 사건(2021. 3. 18.)

##### ❶ 행위 사실 -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 (기타의 거래 거절)

- 울산 향운노조는 울산지역 향만 하역 인력 공급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던 중, 2015. 8. 온산 향운노조가 추가로 공급사업 허가 받자,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
- 농성용 텐트·차량·조합원 등 동원하여 부두 진입 통행로를 봉쇄하는 등으로 경쟁자 작업장 진입을 방해하였고, 이에 따라 온산 노조는 부두 진입 불가로 관련 하역 작업 중단 및 고객과 계약 해지

##### ❷ 제재

-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 과징금 총 1천만 원

#### 현대건설기계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 (2021. 6. 23.)

##### ❶ 행위 사실 -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 현대건설기계는 2009. 6. ~ 2016. 2. 동안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 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이를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과 상계(공제)한 후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

##### ❷ 위법성 판단

- 거래상 지위: 대리점들은 계약에 따라 현대건설기계의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으며, 모두 현대건설기계의 제품만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이고 현대건설기계의 경쟁업체들도 각 지역마다 전속대리점을 두고 있어 현대건설기계 이외의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가짐
- 부당성: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구매자에 대한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상계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전가한 것으로 부당함

##### ❸ 제재

-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 과징금 총 5,500만 원

## 타. 불공정거래행위 FAQ

### Question

공정거래법상 거래 거절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 거래 거절이라 함은 어떤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함
- » 그리고 경쟁자에 의한 염매를 방지하고 가격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경우 등과 같은 공동의 거래 거절과 기타의 거래 거절로 구분
  - **공동 거래 거절** : 공동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특정의 사업자가 거래의 기회를 빼앗겨 시장으로부터 배제될 우려가 많고 거래 거절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도 상호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법이 됨
  - **기타 거래 거절** :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시장 유력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 거절을 함으로써 거래 거절당한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시장 배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 인정

### Question

협력업체 평가를 통해 대금 결제 금액에 차등을 둘 수 있나요?

- »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 따라서, 협력업체 평가 결과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대금 지급 시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협력업체에 대금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증액(인센티브 성격) 하는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나 대금 결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차별 행위는 부당 차별취급 또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 높음

### Question

“갑”이 “을” 이외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을”이 “갑”과 거래 시 영업비밀 누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을”이 “갑”의 거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 사업자는 거래처 및 거래 내용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으므로 거래처의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어떤 특정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음
- » 다만, 부당히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부당한 거래 거절)는 공정 거래 저해 우려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됨
- » 여기서 ‘부당한 거래 거절’ 해당 여부는,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여부(거래 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이나 용역의 필수성, 대체 거래선 존재 여부, 거래 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거래 거절로 인해 경쟁 사업자의 시장진입 곤란성 등), 거래 거절의 사유 등 합리성 유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 따라서, “갑”이 “을” 이외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어 “을”의 거래 거절로 인하여 “갑”의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을”이 “갑”과 거래 시 영업비밀 누출 우려 등 정당한 사유로 거래를 거절하였다면 부당 거래 거절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Question**

회사 업무를 타 회사 승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경영간섭에 해당하나요?

- » 경영간섭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경영간섭 부당성 여부, 기타 합리적 사유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영간섭의 내용이 당사자 간 충분한 합의하에 이루어진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거래 상대방의 경영활동 해당 업무를 승인을 받게 하고 있다면 위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수 있음

**Question**

A사는 경쟁 사업자 위치에 있는 B사를 배제하기 위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 »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두어 금지하고 있음
- » 이는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를 의미함
- » 예로, 치약 제조사가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치약을 개당 1원으로 응찰하여 낙찰받은 후 330만 개를 공급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판례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고, 당해 염매 행위의 의도, 목적, 염가의 정도, 행위자의 사업 규모 및 시장에서의 지위 염매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 4686판결) 하고 있음
- » '계속 거래상의 부당 염매'의 경우 사업자가 채산성이 없는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그 행위의 외형상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기타 거래상의 부당 염매'의 경우 그 행위 태양이 단순히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것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공정 거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 4686 판결).
- » 따라서 A회사가 부당 염매를 한다고 하여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만일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와 함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임

## 4. 부당지원행위

### 가. 개관

» 부당하게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①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채 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또는 ②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함

###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채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부당한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당하게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등의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li> <li>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li> </ul>
부당한 상품, 자산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당하게 특수 관계인 또는 타 회사에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자산 또는 용역·상품을 상당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li> </ul>
부당한 인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당하게 특수 관계인 또는 타 회사에 인력을 상당히 높거나 낮은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li> </ul>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또는</li> <li>타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특수 관계인이나 타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 또는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 대비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 관계인·타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li> </ul>

» 이와 같은 부당지원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지원 주체의 지원 객체에 대한 지원행위가 존재하고 (지원행위성), ② 이러한 지원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부당성)

## 나. 지원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원칙

### ① 자금거래의 경우

»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와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와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

· 이러한 지원행위는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이러한 지원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실제 적용된 금리(이하 “실제 적용 금리”라 한다)가 해당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 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

### ▣ 자금거래에 의한 부당지원행위 예시

-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 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계열금융회사에게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여하는 경우
- 계열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지원 객체에게 저금리의 콜자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 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지원 객체에 저금리로 대출하도록 하는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지원 객체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주식매입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사에 자금을 저금리로 예탁하는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지원 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게을리 하는 경우
- 지원 객체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 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지원하는 경우
- 지원 주체가 제3자인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한 다음 이를 다시 지원 객체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지원 객체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도록 하는 경우

## ②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거래한 경우

- »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에게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이나 기타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함. 또한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에게 자산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지원행위에 해당
- »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 간의 자산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 중 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자산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

### ▣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거래에 의한 부당지원행위 예시

- 지원 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 매입]
- 지원 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 매입]
- 지원 주체가 제3자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매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을 지원 객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 매입]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지원 객체가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금리로 매입하는 경우 [주식 또는 기업어음 고가 매입]
- 계열 투자신탁 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지원 객체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금리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고가 매입]
- 금융회사의 특정증권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위탁자의 특수 관계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를 저금리로 인수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 고가 매입]
-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 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지원 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사채 고가 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失權株)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지원 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 고가 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지원 주체가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증자 전의 지분율의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하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1대 주주로 보지 아니함) [주식 고가 매입]
-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높은 가격으로 우회 인수하거나 기타 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 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 우회 인수]
- 전환권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지원 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우회 인수하는 경우 [전환사채 고가 매입]
- 지원 객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지원 주체가 제3자인 대주단(貸主團)에 지원 주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대주단과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하여 대주단으로 하여금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하는 경우 [전환사채 고가 매입]

- 경영권 방어목적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전환권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 전환가액의 차액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지원 주체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환사채 저가 주식 전환]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지원 객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매각]
- 비계열 금융회사에 후순위 대출을 해주고, 동 금융회사는 지원 객체가 발행한 저금리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회사채 고가 매입]
- 계열금융회사가 지원 객체가 보유한 부동산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경우 [부도 유가증권 고가 매입]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 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 객체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 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 객체에 무상양도 하여 지원 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무체재산권 무상양도]

### ③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 »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 임대료보다 상당히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거나 정상 임차료보다 상당히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 또한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에게 부동산을 상당한 규모로 임대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
  - » 정상 임대료는 해당 부동산의 종류, 규모, 위치, 임대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형성되었을 임대료로 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함.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에금이자율은 임대인이 정한 이자율이 없거나 정상 이자율로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한 정기에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함
- 정상 임대료 산식: (부동산 정상가격의 50/100)×임대일수×정기에금이자율/365 = 해당 기간 정상 임대료

### ▣ 부동산임대차에 의한 부당지원행위 예시

- 지원 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저가 임대]
- 임대료를 약정납부 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부동산 저가 임대]
- 지원 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 임차]
-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 소유 건물·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 임차]



#### ④ 상품 용역을 거래한 경우 - 거래 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

- »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와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
- » 상품·용역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 중 거래 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는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상품·용역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

#### ▣ 상품용역 거래에 있어 거래 대가 차이로 인한 부당지원행위 예시

- 지원 객체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 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는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 대금을 약정 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지원 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 하는 임직원에게 구매 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 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 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 지원 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 광고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주택 관리업무를 지원 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 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 주는 방법으로 지원 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경우
- 지원 객체가 지원 주체와의 상품·용역 거래를 통하여 지원 객체와 비계열회사 간 거래 또는 다른 경쟁 사업자들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품·용역의 내용·품질 등 거래 조건이 유사함에도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나타내는 경우

#### ⑤ 상품 용역을 거래한 경우 -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 »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와 상품·용역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
- »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 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 기간, 지원 횟수, 지원 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여타 경쟁 사업자의 경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 ▣ 상품용역 거래에 있어 거래규모로 인한 부당지원행위 예시

-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에게 각종 물류업무를 비경쟁적인 사업양수도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분 몰아주는 경우

## ⑥ 인력을 제공한 경우

- »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 또한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와 인력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
- » 인력 지원행위 중 전자의 경우에는 지원 객체가 지원 주체 또는 해당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이 해당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보다 상당히 적은 때에 성립

### ▣ 인력지원에 의한 부당지원행위 예시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 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지원 주체가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는 경우
- 지원 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 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지원 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지원 주체가 자신의 인력을 지원 객체에 전적·파견시키고 급여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 ⑦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통행세 거래)

- » 지원 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 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
- » 거래상 지원 객체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원 객체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지원행위에 해당

### ▣ 거래단계 추가에 의한 부당지원행위 예시

- 통상적인 직거래 관행 및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 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지원 객체의 역할을 지원 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 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 지원 주체가 직접 공급사로부터 제품을 구매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 객체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 하는 경우
- 지원 주체가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 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 다.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 »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 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 기간, 지원횟수, 지원 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 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 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 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 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 이러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 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않음
- » 사업자가 아닌 특수 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특수 관계인이 해당 지원행위로 얻은 경제상 급부를 계열회사 등에 투자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원 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하며,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

### ▣ 부당성이 인정되는 예시

- 지원 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중소기업들이 합하여 1/2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시장에 참여하는 계열회사에 대해 동일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 지원행위를 하여 해당 계열 회사가 시장점유율 5% 이상이 되거나 시장점유율 기준 3위 이내 사업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 지원 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 객체가 지원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경쟁 사업자보다 상당 기간 낮게 설정하여 경쟁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기업집단 외부의 경쟁 사업자(잠재적 경쟁 사업자 포함)가 진입하기 힘들어 지원 주체의 지원행위로 지원 객체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 하게 별 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사업 기반이 공고하게 되는 반면, 해당 기업집단 외부의 다른 경쟁 사업자들은 지원 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
- 지원 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해 경쟁자에 비하여 경쟁 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 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자금력, 기술력, 판매력, 제품이미지 개선 등 사업 능력이 증대되어 사업 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쟁 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 주체의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 객체가 사업 기반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재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게 되는 경우
- 지원 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 객체의 퇴출이나 타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해당 계열회사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신규진입이나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 불공정한 방법, 경쟁 수단, 절차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증권회사가 「유가증권 인수 업무규정」상 계열증권사의 회사채 인수 금지규정을 면탈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를 주간사회사로 내세우고 자신은 하인수회사가 되어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경제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증권회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경우

## 라. 부당지원행위 제재

### ① 시정명령

---

- »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부당지원행위의 중지, 시정명령받은 사실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 ② 과징금

---

- »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③ 형사처벌

---

-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

## 마. 부당지원행위 사례

### 와인 판매 자회사에 대한 롯데칠성(주)의 부당지원 사건(2021. 6. 17.)

#### ▶ 행위 사실 -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 롯데칠성(주)는 자신이 수입한 와인을 자회사 MJA를 통해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었음
- 자회사 MJA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롯데칠성은 MJA 손익 개선 및 백화점 판매채널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MJA에 총 35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지원
  - **와인 저가 공급**: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 할인율을 타 거래처보다 높게 책정
  - **판촉사원 비용 부담**: MJA의 와인 판촉사원 비용(용역비)을 롯데칠성이 직접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부담
  - **모회사 인력 제공**: 롯데칠성 직원들이 MJA의 핵심 업무(소매 관련 기획·영업 등)를 담당하고, 이에 대하여 MJA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 ▶ 제재

-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행위 중지 명령)
- 과징금 총 11억 8,500만 원
- 고발(롯데칠성(주))

### SK텔레콤의 舊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 사건(2021. 8. 25.)

#### ▶ 행위 사실 -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SK텔레콤(이하 'SK')은 2009. 1. 자사 음원 사업 부문인 '멜론'을 당시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에 양도함에 따라 운영 주체가 SK에서 분리됨에 따라, 로엔은 타 음원 사업자와 같이 이동통신 휴대폰 결제 청구 수납 대행 계약을 체결.
- SK는 로엔의 2009년 청구수납 대행 수수료율을 타 음원 사업자와 유사한 5.5%로 적용했으나, 2010~2011년에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1.1%로 인하하여 로엔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 52억 원 가량을 미수취. 이후, 로엔의 1위 사업자 지위가 공고화되자, SK는 수수료율을 2009년과 같은 5.5%로 재인상하여 지원행위를 종료
- 한편, SK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 해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SK 내부자료 발췌

“SKT가 전략적으로 로엔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Risk에 노출”, “SKT 경영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공정거래 리스크 제거”, “공정위의 발견 가능성 및 법적 Risk가 대단히 높음” 등

#### ▶ 제재

-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행위 중지 명령)

### 하림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2022. 1. 27.)

#### ▶ 행위 사실 -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통행세 거래'

- 하림그룹 총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올품"\* 지분 100%를 2세에 증여한 후, 하림 계열사들은 총수와 그룹본부 개입 하에 물품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행위를 통해 올품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 고가 매입 행위 :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 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들의 동물 약품 구매 방식을 종전 계열 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 구매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약 4년간 동물 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
  - 통행세 거래 행위 : 계열 사료 회사들의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 방식을 종전의 각 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5년간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이 구매 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
  - 주식 저가 매각 행위 : 하림지주(舊 제일홀딩스(주))는 2013년에 본인 보유 舊 올품 주식 100%를 한국섬뽕판매(現 올품)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27억 원을 부당지원
- 올품(舊 한국섬뽕판매(주))은 하림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함

#### ▶ 제재

-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 과징금 총 49억 7,400만 원

### 이랜드리테일의 변칙적인 자금 및 인력 부당지원 사건 (2022. 5. 16.)

#### ▶ 행위 사실 -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 이랜드리테일은 계열회사인 이랜드월드에게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이랜드월드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었음
- 이랜드리테일은 2016. 12.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60억 원을 지급한 후,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 대어
  - 이랜드리테일은 대규모 자산 거래임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되었고, 내부적으로도 부동산 활용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자산 취득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설정되지 않았음
- ▶ 이랜드리테일은 2014. 7. 'SPA0'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게 이전하였으나, 자산 양도 대금 511억 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음
  - 이랜드리테일은 이관 대상 브랜드인 SPA0가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이 있다는 점, 반면 이관받는 주체인 이랜드월드는 양도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양도 대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자산을 양도하였음
  - 이를 통해 이랜드월드는 미지급 금액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공급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며,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최소 35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음
- ▶ 이랜드리테일은 2013. 11. ~ 2016. 3. 기간 동안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

#### ▶ 제재

-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 과징금 총 49억 7,400만 원

## 바. 부당지원행위 FAQ

### Question

부당지원행위는 계열사 간의 거래에만 성립하나요?

- »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은 '사업자는 부당하게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은 계열사 간 거래뿐만 아니라 계열사 외 제3자와 거래 시 해당 제3자와 당사와의 관계에서도 적용(예: 당사 계열사가 아닌 역할 없는 제3자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여 거래 ⇒ '역할 없는 통행세 거래'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

### Question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 간에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나요?

- » A회사가 B회사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즉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양자는 법률적으로 별개인 독립한 거래주체이므로 모회사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 등 거래를 통해 자회사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자회사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공정 거래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함
- » 대법원은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 사이의 지원행위도 부당지원행위 규율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 Question

용역 대가를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나요?

- » 부당지원행위란 반드시 어떠한 지원이 직접적,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작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
- » 사업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거나 방임(부작위)함으로써 계열사 등의 상대방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그러한 부작위 행위도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지원행위라 할 수 있음
- » 예로, 자금지원 의도로 자산·용역 등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않아 지원 객체가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이자 상당액의 금융상 이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 행위도 충분히 부당 자금지원행위 해당 가능

Question

계열사 거래 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하면 부당지원행위가 되나요?

- »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열사에게 발주한 사실만으로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
- » 수의계약에 의한 거래가 부당지원으로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① 지원 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이 제공된 부분이 있어야 함
    - 수의계약에 따른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가 있어야 함
    - 예)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율과 수의계약에 의한 낙찰율 차이가 현저한 경우 등
  - ② 당해 지원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부당성)
    - 공익 목적의 수의계약인 경우는 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음
    - 부당성 판단은 지원 주체·객체 간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 성 거래 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Question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지원행위가 인정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조치가 무엇인가요?

- »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지원행위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용역에 대한 대가가 '정상가격'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이러한 검토 과정을 담은 서류를 생산하여 이를 보관하여 둘 필요가 있음(회계적 방법으로 가치평가가 가능한 경우 회계법인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한 가치평가를 거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 아울러 계열회사 이외에도 동종의 상품·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와 계열회사가 각 제공할 수 있는 거래 조건의 유·불리를 면밀히 비교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검토 과정을 담은 서류를 생산하여 이를 보관하여 둘 필요가 있음



## 5.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가. 의의

- »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 »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강제성)
  - 강제성 유무는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 직접적인 강제 행위가 없더라도 재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봄
  - ① 희망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을 규정한 경우
  - ② 제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경우

### 나. 위법성 판단기준

-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위법한 것으로 봄
- » 다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할 때는 관련 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 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

### 다. 위반 시 제재

#### ① 시정조치

-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중지, 공표명령 등

#### ② 과징금

- » 관련 매출액의 4% 이내
- »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원 이내

#### ③ 형사처벌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례

(주)한컴라이프케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2023. 5. 8.)	
▶ 행위 사실	<p>→ 한컴라이프케어는 2021. 5.부터 2021. 10.까지 대리점 등에게 자사 KF94 마스크의 온라인 최저가격을 지정(개당 390원)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였음</p> <p>→ 한컴라이프케어는 월 1회 온라인 판매가 현황을 점검하고, 지정 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판매자에 대하여는 거래를 중단함</p>
▶ 제재	<p>→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p>

리퓨어헬스케어(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2023. 5. 9.)	
▶ 행위 사실	<p>→ 리퓨어헬스케어(주)는 2011.경부터 2022. 9.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표'를 제공하고 소비자 판매가 준수를 요구하였음</p> <p>→ 리퓨어헬스케어(주)는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을 점검하였고,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하였고, 실제로 공급 가격표에 기재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동물병원에 대하여 관할 대리점으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함</p>
▶ 제재	<p>→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p>

나라바이오(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2023. 5. 22.)	
▶ 행위 사실	<p>→ 나라바이오(주)는 2018. 7.경부터 2021. 12. 31.까지 2개 총판 거래처를 통해 자신의 제품을 전국에 유통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인 '판매 지시 가격'을 정하여 총판 및 대리점들이 유통과정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음</p> <p>→ 나라바이오는 총판이 판매 지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자,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해당 총판을 상대로 법원에 판매금지를 청구함</p> <p>→ 2022년부터는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지정 판매점을 통해 유통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여 저가 판매가 적발될 경우 1차(경고 및 물량 조절), 2차(출고단가 인상), 3차(거래 중단)에 따른 제재를 예고하고 일부 판매점에 대하여 이를 시행하였음</p>
▶ 제재	<p>→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p>

## PART 4. 하도급법 해설

### 1. 하도급법 개관

#### 가. 하도급 거래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위탁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의미

하도급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위탁'	
제조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규격, 품질, 성능, 형상, 디자인, 브랜드 등을 지정하여 제조(가공 포함)를 의뢰하는 경우</li> <li>▪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 소비용의 단순한 일반 사무 용품의 구매</li> <li>•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li> </ul> </li> <li>▪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li> </ul>
수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li> </ul>
건설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경미한 공사 포함)</li> <li>• 「전기공사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경미한 공사 포함)</li> <li>•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사업자</li> <li>•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사업의 등록을 한 자</li> </ul> </li> <l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li> </ul>
용역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li> </ul>

## 나. 원사업자

- »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 중 수급업자보다 연간 매출액 등이 더 많고,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연간 매출액 이하가 아닌 기업을 의미

## 다.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 등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의미
- » 중견기업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보복행위 금지 규정 등 하도급법의 일부 규정의 경우에만 수급사업자에 해당

## 2. 계약 체결 관련 사항

### 가. 서면 발급 및 보존의무

#### ① 서면발급의무

- »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함. 이때 발급의 기준은 양사 기명날인 시점이 됨
- » 서면에는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과 그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기일,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하여야 함

#### ② 서면의 보존의무

- » 하도급 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 내용, 하도급대금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서류로 작성하여 3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하여야 함(단, 기술 자료는 관련 거래 자료는 7년).
- » 보존해야 할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함(전자 문서도 동일)
- » 보존 대상 서면 리스트

연번	보존 대상 서면	근거
1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법 제3조 제6항
3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법 제8조
4	검사 결과 통지서	법 제9조
5	감액 서면	법 제11조
6	기술 자료는 제공 요구서	법 제12조의3
7	계약 변경 내역 통지서	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 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 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10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 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 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 금액 및 조정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 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 ③ 하도급계약 추정 제도

- »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 성립을 추정하는 제도
- »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회신에는 반드시 원사업자의 서명 날인 필요)

### ④ 계약 시 주의사항

- » 법정기재 사항이 일부, 전부 누락된 서면을 발행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서면 발행에 해당함
- » 제조에 착수한 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위반(서면 지연 교부)에 해당함
- » 실제의 하도급 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허위서면발급에 해당함

## 나. 부당특약

### ① 서면발급의무

- » 하도급계약조건 중 “수급사업자”(협력업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의미
  - “계약조건”은 “하도급계약서”라고 명기된 서면에 기재된 문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서면의 명칭, 형태 불문)
- » 부당특약은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그러한 약정의 체결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 부당한 특약으로 추정되는 경우

- 서면 미기재 사항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 계약 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금지
  - 계약서 외 기타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업무 비용을 업체에 부담시키는 것도 불가
-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금지. 단,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얻어 관련 보험의 사업주 지위 이전
  - 단,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합당한 비용이 별도로 지불되어야 함
  - 판단기준
    - 민원 처리 비용 :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분쟁·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민원, 용지보상 분쟁 및 이와 유사한 각종 민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분쟁 등을 해결·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산업재해 관련 비용 :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관계 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목적물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입찰내역과 무관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 산출내역서 : 원사업자가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수급사업자가 입찰 시 작성, 제출하여 낙찰받은 내역서
  - 산출내역서 외 다른 서류에 반영한 사항이나 산출내역서에 포괄적으로만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업무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됨
  - 단,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단가 미기재 등) 또는 견적 착오(규격·수량·단위 등 오기)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는 제외

- 하도급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특약
  -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 관련 법령, 매출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 다. 관련 사례

파인건설(주)의 하도급대금 부당특약 설정행위 (2023. 1. 17.)	
▶ 행위 사실	→ 파인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현장설명서 및 공제 약속서에 ① 환경관리 비용(폐기물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과 ②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설정하였음 - 그 밖에 파인건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도 함께 문제 되었음
▶ 위법성 판단	→ 특약 ①의 경우, 품질관리 또는 환경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특약 ②의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부당 특약에 해당함
▶ 제재	→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삼성중공업(주)의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 (2023. 6. 5.)	
▶ 행위 사실	→ 삼성중공업(주)는 2019. 9. ~ 2020. 4.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게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 ~ 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음
▶ 위법성 판단	→ 이는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함
▶ 제재	→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 과징금 총 3,600만 원

## 라. FAQ

## Question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경우, 당사의 도장만이 날인된 발주서를 우선 발급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양 당사자 기명날인된 정식 계약 서면은 추후 발급하여도 무관한가요?

- »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여야 하는 계약 등 서면의 경우, 양 당사자 기명날인이 완료된 완전한 서면이어야 함
- » 일방 당사자의 인장만이 날인된 발주서를 발급하여 업체에 업무 지시할 경우 하도급법상 사전 서면 교부의무 위반이 되므로 유의
- » 한편, 그러한 “완전한 서면”은 반드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업무에 착수하기 이전에 발급 완료되어야 함

## Question

어떠한 계약 조건들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이 될 수 있나요?

- »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수급사업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말함
- » 이러한 부당특약은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하도급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첨부 문서 등 포함)
- » 부당특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당한 계약조건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계약기간 중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 금액 증액 등 하도급대금의 조정 일체 요구 불가
  - 인건비 상승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금액 이외 공사비 증액 요구는 불가하고, 이를 이유로 공사 지연 및 공사 거부행위를 일절 할 수 없음
  - 발주자 요청에 의한 계약 내용 변경 관련 추가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 없는 업무라도 전체 시공에 필요한 업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계약 금액 5% 미만의 경미한 추가 비용 발생 시 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 3. 하도급대금 관련 사항

####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 »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또는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할 수 없음
- » 부당한 방법 여부는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성실히 제공하고 충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거래 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 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수단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거래상 지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예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제시하는 등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반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에서 정하는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또는 차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 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

- »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때에만 감액할 수 있음
- » 이때 감액의 정당한 사유는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와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
-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는 지연 이자(15.5.%)를 지급하여야 함

## ▣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예시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 요청, 고객의 발주 취소, 경제 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 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절한 구매 대금 또는 적절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 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다. 구매 강제 행위

- » 원사업자가 건설 등의 위탁을 하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입하게 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함

### ■ 구매 강제 행위 예시

- 구매·외주 담당자 등 하도급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목표량을 할당하여 구입을 요청하거나 불응 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됨을 시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수급사업자가 구입 의사가 없음에도 재차 구입을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관련이 없는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 라. 경제적 이익 부담 요구

-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경제적 이익'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

###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행위 예시

- 원사업자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는 경우
- 거래 개시, 다량 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장려·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 마.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
- » 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 가능
- » 하도급대금의 감액 또는 증액 시에는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가 아닌 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필요
- »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 하도급대금 조정의 구체적 방법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 금액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 비율을 적용 지급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발주자 조정 이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발주자 조정 기준시점 이후 잔여 공사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준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봄
-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함. 다만, 조정 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 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기 첫 번째 항에 따라 적용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 관련 추가 금액을 지급받고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약정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를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
- 물가 변동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추가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 주는 데 있어 물가 변동 조정 기준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 변동 조정 대상 금액에서 제외 가능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의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 필요

## 바.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의무

### ① 조정협의 신청

-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 신청 가능

### ② 조합의 협의개시 요건

- » 아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수급사업자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위와 같은 협의 가능
  - 하도급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일을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한 경우
  - 하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

### ③ 조정 협의의무의 발생요건 및 의미

- » 납품단가 조정 협의의무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인건비 상승, 저가수주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이유로는 인정 불가
- »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지만, 원사업자가 그 조정 신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 ④ 정상적인 조정이 아닌 경우

- » 조정협의 신청에 응하지 않거나, 개시 이후 회의 개최, 의견교환, 단가 조정안 제시 등의 실질적인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 권한 또는 그에 준하는 책임을 가진 담당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 단가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인 근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신청 내용을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일정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경우

### 사. 관련 사례

#### (주)유니크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2023. 4. 7.)

##### ▶ 행위 사실

→ 유니크는 2019. 2. 27.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한 자동차 부품 제작 단가를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인하하기로 A사와 합의하였으나, 단가 인하 합의를 작성하면서 합의 성립 이전인 2019. 1. 1. ~ 2. 26. 기간 동안 제도가 완료된 제품에까지 인하단가를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4,264만 원을 감액하였음

##### ▶ 제재

→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 지급명령(하도급대금 감액분 4,26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 과징금 3,800만 원

#### (주)지에스리테일의 판촉비 등 수취 행위 (2022. 9. 7.)

##### ▶ 행위 사실

→ **성과장려금 수취** : 지에스리테일은 2016. 11.부터 2019. 9.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 7,800만 원을 수취하였음

-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인 지에스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음

→ **판촉비 수취** : 지에스리테일은 2016. 11.부터 2019. 9.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판촉 비용 중 총 126억 1,200만 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고,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하였음

→ **정보제공료 수취** : 지에스리테일은 2020. 2.부터 2021. 4.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 3,800만 원을 수취하였음

-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지에스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하여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

##### ▶ 제재

→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 과징금 243억 6,800만 원

**(주)홍성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2022. 7. 15.)**

❖ **행위 사실**

→ 홍성건설은 수급사업자가 2,435,569,331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최저가로 낙찰되었음에도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천만 원단위 이하의 금액을 절사하여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제재**

→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 과징금 2,700만 원

**동하정밀(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2022. 4. 28.)**

❖ **행위 사실**

→ 동하정밀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하여 실시 하는 출하 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347,918,804원을 감액하였음

→ 또한 동하정밀은 손해배상 청구비용 공제 명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0,648,795원을 감액하였음

- 발주자에게 납품한 제품은 동하정밀이 후공정 후 실시한 출하 검사에서 합격 처리한 제품으로, 불량에 대한 귀책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제재**

→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 지급명령(하도급대금 감액분 101,606,0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 과징금 3억 2,900만 원

## 아. FAQ

**Question**

하도급계약 시점에 따른 물가 변동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 물가 변동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적용해 주어야 하는 의무 유무 여부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위탁)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조정받은 조정기준일 이전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조정기준일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의무는 없음
- » 단, 계약 지연 등으로 정식 계약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체결되었으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 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함

Question

하도급계약 시 물가 변동 적용이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도 하도급법 규정에 따라 물가 변동 관련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하나요?

- »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하도급법 규정과 당사자 간 약정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상관없이 하도급법이 적용됨
- » 하도급법상 물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정의 내용과 무관하게 원사업자는 물가 변동을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어야 함
- » 한편, 본건 질의와 같이 하도급계약에 물가 변동 적용은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침해(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권을 배제하는 약정)하는 부당특약으로 인정 소지 있으므로 유의

Question

경쟁입찰을 통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한 후 수급사업자의 투찰 금액은 변동 없이 세부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변경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 저촉되나요?

- » 투찰금액 변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합의 등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세부 단가를 일률적으로 변경·결정하는 행위는 추후 세부 공종 단가별로 발주자의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선급금 지급 등에 따른 추가 금액 반영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에 불이익 발생 우려 존재
- » 따라서, 본건 질의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Question

하도급대금 지급 시 특정한 품목의 단가 단위를 절삭(10만 원 이하 단위 절삭 등) 하여 하도급 금액이 일부 감액된 경우 하도급법상 부당 감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 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감액금지에 위반되는 부당감액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 시 사전에 명시된 감액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단가의 10만 원 이하 금액을 절삭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감액 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

## 4. 하도급계약 이행 관련 사항

### 가. 부당위탁취소

#### 정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

#### ① 위법성 판단 기준

- » 부당위탁취소 여부는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취소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및 취소한 위탁계약의 범위, 계약 이행 상황, 위탁취소의 방법·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수급사업자에게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 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 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착공을 거부하여 납품 등의 시기(이하 “납기”라 한다)에 완성·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②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

-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의미
- » “임의로” 위탁취소 여부는 위탁취소 사유가 해당 하도급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 위 계약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실질적 협의 여부는 위탁취소 사유 등이 정상 거래 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 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 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 ③ 부당한 위탁취소로 볼 수 없는 경우

- » 수급사업자가 상당 기간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자발적인 공사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납기 내 공사 완공 가능성이 없어 위탁을 취소(해지) 하는 행위
- » 다른 사업자의 신형모델 출시로 해당 목적물이 부속되는 제품의 판매 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해지) 하는 행위

#### ④ 목적물 수령증명서 발급 의무

- »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을 때는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난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함

### 나. 부당수령거부

#### 정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① 위법성 판단기준

-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부당한 위탁취소와 마찬가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수급사업자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목적물의 제조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의 사정으로 해당 기간이나 계절을 넘겨 납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의 품질·성능 등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물 등의 생산과정 또는 납품 등을 위한 운송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목적물 등이 오손·훼손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부당반품

#### 정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총칭

#### ① 위법성 판단기준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을 반품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 » 위탁계약 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 이행 내용과 위탁할 때의 반품조건, 검사 방법, 반품에 따른 손실의 분담, 목적물 등의 수령부터 반품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이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과 다르거나 목적물 등에 하자 등이 있고 이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



## ② 부당반품의 예시

- »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하는 행위
- » 수급사업자의 납기 지연이 있었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 중단,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사양 변경·모델 단종·판매 부진·재고 증가·보관소 부족 또는 소비위축·경제 상황 변동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과는 무관하여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유로 반품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 불량으로 인한 것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 라. 목적물의 검사

### ① 목적물 검사 의무

- » 위탁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함
- » 검사 방법에는 전수검사, 발췌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 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위임, 무검사 합격 등이 존재

### ② 검사 결과 통지 의무

-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 » 따라서 원사업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품을 반품하거나 대금을 감액할 수 없음
- » 검사 결과 통지 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일 평균 검사 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거대한 건설공사(담·교량 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가능

## 마. 관련 사례

### (주)제넨바이오의 부당한 수령거부 및 위탁취소 행위 (2023. 1. 6.)

#### ▶ 행위 사실

- 제넨바이오는 제조위탁한 마스크 포장재의 일부를 수령한 후, 납품 기일 및 납품 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여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납품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잔여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
- 이러한 이유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코로나19로 폭등한 마스크 가격이 마스크의 수급 안정화로 하락하자 그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위탁을 취소한 것임
- 그 밖에 불완전한 서면 발급 행위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문제 됨

#### ▶ 제재

-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 (주)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주)의 부당한 수령거부 및 위탁취소 행위 (2022. 3. 31.)

#### ▶ 행위 사실

- 2016. 4.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후 위탁한 목적물을 2016. 5. 수령하였으나, 398만 원 상당의 위탁 목적물을 물품 초과 납품 등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신고인에게 반품하였음
- 그 밖에 서면 미발급 행위,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등이 문제 됨

#### ▶ 제재

-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 과징금 2,000만 원

### (주)티제이이노베이션의 부당한 수령거부 및 위탁취소 행위 (2022. 9. 16.)

#### ▶ 행위 사실

-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20. 4. 3.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한 후 다른 거래처의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로 발주한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음
-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20. 3 ~ 2020. 4. 수급사업자에게 20백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목적물을 제조위탁한 후 납기일을 3일 앞둔 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안테나 검수기준을 마련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른 검수를 받지 않으면 납품을 받지 않겠다면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였음

#### ▶ 제재

-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 바. FAQ

### Question

현재 하도급계약 이행 중인 수급사업자의 재정 문제로 소속 직원의 퇴사가 이어지는 등 해당 수급사업자 담당 업무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를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위탁취소에 해당하나요?

- »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로 규정하여 제재하고 있음
- » 본건의 경우, 업체 재정 문제로 향후 계약 이행 가능성이 불안정해 보인다고 하여, 해당 하도급계약상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 하도급업체와 계약 해지 시는 반드시 ① 하도급계약에 정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② 동 계약에서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해지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
  - 해당 계약상 해지 사유, 절차 등이 정당한 내용인지(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 필요

### Question

수급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검사까지 완료하였으나 현재 당사에 해당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여 수급사업자에 양해를 구한 다음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돌려보낸 뒤 이를 잠시만 보관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당반품에 해당하나요?

- » 하도급법상 부당반품행위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과는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총칭함
- » 따라서, 본건의 경우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부당반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업체와 별도 물품보관 계약 등을 체결하여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 있음

## 5.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 가. 선금금의 지급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 발주자가 선금금의 사용 용도, 지급 대상 품목 등 선금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상기 방식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금금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됨
- » 선금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할 때는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또는 수수료(금융기관과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율)를 지급하여야 함
- » 법 위반 예시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고 15일이 지난 이후에 선금금을 지급하는 경우
  - 선금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성 비율에 맞추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시에 전액을 공제하거나 기성율보다 높게 선금금을 조기 공제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40% 수령하였으나 하도급업체에는 25%만 지급한 경우

## 나. 하도급대금의 지급

### ① 하도급대금의 지급 시기

-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 »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의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됨
- » 단, 발주자로부터 도급 대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시기 중 더 빠른 일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② 지연이자 등의 지급

- » 선급금, 하도급대금을 위 지급 시기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필요
- » 이자율은 공정위 고시 비율에 따름(2022. 4. 기준 연 15.5%)

### ③ 현금 지급 비율 및 어음 만기일 유지 의무

-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지급 불가
- » 이 경우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준공금이나 기성금의 현금비율보다 같거나 더 높은 비율로 지급하여야 함

### ④ 중견기업에의 적용

- » 하도급대금 지급 조항은 중견기업과 원사업자 간 거래에도 적용

## 다. 부당한 대물변제

-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 불가
-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의미는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았지만 원사업자의 의사에 의하여 할 수 없이 합의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당초부터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는 대물변제로 보기 어려움
- » 대물변제 시 서면 교부 절차
  - 원사업자는 변제 전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 확인 가능한 자료를 수급사업자에 제공
  - 변제 시 지체 없이 원사업자 자료 제시일, 자료 주요 목차,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받은 사실, 양 당사자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상호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 교부

## 라.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및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 ① 관세 등 환급액 지급의무

- »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등과 관련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따라 지급
- » 위 기간(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보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필요
- »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연 15.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함

### ②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 » 수출물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15일 이내 내국신용장 개설 필요
- » 내국신용장 개설 시 검사 완료 즉시 물품 수령증(인수증) 교부 필요
- »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 위탁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전/사후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개설 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 다.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 아래 사유 발생 시 의무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 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취소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예외: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 등
  -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기타 사항

- 본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 금액은 차감하여 지급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필요

## 바. 관련 사례

### (주)대우건설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및 지연손해금 미지급 행위 (2015. 9. 22.)

▶ 행위 사실

-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및 지연손해금 미지급) 2013. 1. 1.부터 2014. 11. 30.기간까지 37개 현장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41개 수급사업자에게 전문 건설공사, 전기공사, 엔지니어링 활동 등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어음수수료 미지급) 2013. 1. 1.부터 2014. 11. 30.기간까지 100개 현장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85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 (현금결제 비율 미유지) 2013. 11.1.부터 2014. 11. 30.까지 5건의 공사를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아 10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대금 현금 비율 미만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100% 현금으로 수령하고, 외담대로 지급한 비중이 48.8 ~ 99.1%)

▶ 제재

-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 과징금 1억 2,600만 원

### 엠브이지토건(주)의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2023. 8. 3.)

▶ 행위 사실

-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중 일부에 대해 건설 중인 세대를 할인분양(계약금 면제) 하는 방식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하도급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대물변제의 사유가 없었음
- 그 외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제재

-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 젯아이씨(주)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 위반 행위(2020. 8. 24.)

▶ 행위 사실

- 피심인은 의류 및 스포츠레저용품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신발 제조를 타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신발 제조를 위탁받은 원사업자가 금형업체에게 신발 제작을 위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였음. 피심인은 금형 제작 대금을 금형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 제재

-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 사. FAQ

## Question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선급금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여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율적으로 선급금을 지급받을 것을 포기하여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른 참작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 » 이 경우 원사업자는 선급금 미지급이 수급사업자 귀책사유라는 점 입증 필요
- » 한편,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 강요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예시하여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강요 행위는 절대 금지됨

## Question

수급사업자가 본인의 건설현장 노동자에 노무비를 미지급하고 있는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에서 해당 노무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나요?

- » 하도급법은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와 직접 지급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건설노동자와 원사업자의 관계는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 관계가 아니므로 이 경우 원사업자에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의무 미발생(노동자는 수급사업자가 아님)
- »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 합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건설현장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 필요

## Question

수급사업자가 하자 보증서를 미제출하여 계약에 따라 하자 보증금 및 하자 보수용 자재 대금 해당 금액을 수급사업자 보증서 제출 시까지 유보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인가요?

- » 하도급법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 귀책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 등을 적용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또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은 목적물 납품 및 인도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요구한 하자보증 의무 등을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서 그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참작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 » 따라서, 계약 등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하자 보증서 등이 미제출 되어 그 범위 내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행위는 상기 참작 사유 해당 가능

**Question**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의 지급의무는 하도급법에 의한 강제 규정으로 수급사업자와 합의로 면제할 수 없음
- » 따라서, 수급사업자와 합의로 미지급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Question**

도급 대금을 수령하지 못해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 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Question**

지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나요?

- » 원사업자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이 그 만기일 이전에 부도 처리되었다면, 이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의 미이행에 해당(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 6. 기술탈취 금지

### 가. 기술 자료

- » 기술 자료란 수급사업자에 의하여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 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위에 포함되지 않는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 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기술 자료는의 정의		
항목	㉠ 비밀관리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
정의	수급사업자가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중	(i)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ii)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iii) 기타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시	작업공정도, 공정 설명서, 작업표준서 지시서), 설계도, 회로도, 공정 또는 설비 배치도, 장비 제원, 시방서, 기계 운용 매뉴얼, 시공 프로세스 매뉴얼, 연구 자료, 연구개발 보고서(실패한 연구 보고서 포함), 소프트웨어 테스트 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등	

## 나. 기술 자료는 제공 강요 및 유용 금지

- »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기술 자료를 유출·유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 사전협의 및 관련 서면을 발급한 경우 기술 자료는 요구를 허용하고 있음
-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공동 특허 개발 과정에서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자료를 요구
  - 공동 기술 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 범위 내에서 개발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요구
  - 제품 하자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하자과 직접 관련된 기술 자료를 요구
- » 원사업자는 기술 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법정 기재 사항이 반영된 비밀유지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 한편 공정위는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정하여 배포하고 있음

### ▣ 비밀유지 계약서의 법정 기재 사항

- 기술 자료는의 명칭 및 범위
  - 기술 자료는의 사용기간
  - 기술 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기술 자료는의 비밀유지 의무
  - 기술 자료는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위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 기술 자료는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 »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함. 일방 당사자의 서명·날인만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서면이 발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 기술 자료 요구 시 발급 서면의 법정 기재 사항

- 기술 자료는 요구목적
- 기술 자료는의 권리귀속 관계
- 기술 자료는의 대가, 대가의 지급 방법
- 기술 자료는의 명칭 및 범위
- 요구일/제공일 및 제공 방법
- 그 외 원사업자의 기술 자료는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취득한 기술 자료는 기술 자료 제공 요구서에 기재한 요구목적, 합의된 사용범위 등을 벗어나 유용·유출할 수 없음

- 유용: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
- 유출: 제3자에게 제공

## 다. 유사 개념: 경영상 정보 제공 요구 금지

»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상 정보” 제공 요구 불가

- 정당한 사유: 위탁 목적 달성 위해 경영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
- 단, 이 경우에도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정보 요구 가능

### ■ 경영상 정보 제공 요구의 정당한 사유 예시

- 원사업자가 법령 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 참여 시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제품 개발 중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미양산 또는 시장가격 미형성 품목의 하도급계약 관련 정산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위반 시 “부당 경영간섭 행위”로 처벌

» 단, 기술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와 달리, 정보 요구 시 별도의 요구 서면 발급은 불필요

경영상 정보의 예시	
경영상 정보의 종류	예시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 관련 정보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수급사업자가 타 사업자에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	제품 개발·생산계획, 판매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	거래처명부, 타 사업자에 납품하는 납품조건(납품가격 포함) 등
수급사업자가 타 사업자와 거래 시 사용하는 전산망의 고유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 접속을 위한 정보	수급사업자가 타 사업자와 거래하는 구매시스템의 명칭, 접속 비밀번호 등

## 라. 관련 사례

## 엘지전자(주)의 기술 자료 요구 서면 미발급 사건(2022. 3. 7.)

## ❖ 행위 사실 -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기술 자료 요구 서면 미발급’)

- 엘지전자(주)는 협력업체에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이메일로 16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 요구 서면을 미발급하였음
- 요구된 기술 자료 : 부품 승인도 및 승인원, 품질 관련 자료
  - 승인도 : 제품 공급 전 원사업자가 최종 승인한 수급사업자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
  - 승인원 :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조립하는데 사용되는 자료로 발주 제품에 대해 사전 약정된 검사 기준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한다는 내용 및 제품의 설계도면이 발주자가 사전 공정한 사양 등에 부합한다는 내용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발송하는 자료

## ❖ 제재

- 시정명령  
→ 과징금 4,400만 원

## 엘에스엠트론(주)의 수급사업자 기술 자료 유용 사건(2022. 3. 3.)

## ❖ 행위 사실 - (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 자료 유용 등 금지’)

- 부당한 기술 자료 유용 : 엘에스엠트론(주)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 자료를 제공받은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본인 단독명의로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방식으로 기술 자료를 유용함.
- 부당한 기술 자료 요구 : 엘에스엠트론(주)은 금형 설계도면을 2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제공받았으며, 요구 시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도면의 제공을 요구하였음.
- 기술 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 또한, 공동 특허출원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방법에 대한 연구 노트를 요구하면서, 법정 요구 서면도 수급사업자에 교부하지 않음.

## ❖ 제재

- 시정명령  
→ 과징금 13억 8,600만 원

## 마. FAQ

## Question

물품의 제작 도면은 기술 자료인가요?

- » 도면의 기술 자료 여부는 자료의 명칭·형태·종류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며, 하도급법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하도급법은 기술 자료를 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② 제조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Question

공정위는 기술 자료를 유용, 유출하는 행위를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으로 규정하여 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자료의 유용, 유출 해당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업체 입찰 제안서의 기술 자료를 직접 유용하거나 계열사 등 제3자에 유출한 경우 [유출]
- » 수령한 기술 자료를 납품가격 경쟁 유도를 위해 업체의 경쟁사에 제공하는 경우 [유출]
- » 사전에 정한 기술 자료 반환·폐기 기한을 위반하여 반환·폐기 없이 해당 자료 사용하는 경우 [유용]
- » 납품단가 인하 또는 업체 변경을 위해 기존 업체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동일 또는 유사 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유용]
- » 거래 종료 후 기존에 제공받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유용]

## Question

기술 자료 요구서는 모든 업체에 다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 규정은 당사와 거래하는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중소기업)일 경우에만 적용
- » 따라서,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기술자료 요구서면 발급 없이 기술자료를 요청해도 무방

## 7. 기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 가.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 불가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 자료의 수출을 이 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나. 보복 조치의 금지

-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 에 대하여 수주 기회 제한, 거래 정지, 그 밖에 불이익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 하도급법에 따른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에 대한 조정신청
  -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 하도급 거래서면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8.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 다. 탈법행위의 금지

- »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가.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 » 공정위는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 중지, 특약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를 명령 가능
- » 또한,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해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나. 공공입찰 참가 제한

- »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그 위반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해 벌점을 부과
- » 과거 3년간의 누산 벌점이 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 참가 제한(5점)-건설법상 영업정지(10점) 요청 가능

### 다.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공표

- »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 경고,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 벌점 4점 초과한 자는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로서 공정위가 그 명단을 의무적 공표

### 라. 과징금

- » 발주자-원사업자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마. 형사처벌

- »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아래 벌금 대상 규정 위반 外 원사업자 의무사항 위반 시
- » 3억 원 이하의 벌금
  - 보복 조치 행위 금지 규정 위반 시
- »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부당 경영간섭·탈법행위 금지 규정 위반 및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 바. 손해배상

- »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발생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함.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 » 다음 경우는 실제 발생 손해의 3배 미만 범위에서 배상 책임 부담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부당위탁취소, 수령 지연·거부, 부당반품 및 부당감액
  - 기술 자료의 유용·유출
  - 보복 조치

## PART 5. 대리점법 해설

### 1. 대리점법 개요

#### 가. 의의

» 대리점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대리점 거래 관계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나. 대리점법의 주요 개념

구분	내용
대리점거래	▪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 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
공급업자	▪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 공급하는 사업자
대리점	▪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
반품	▪ 대리점이 공급받은 상품을 되돌려주거나 대리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공급받은 상품을 공급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주는 모든 행위
판매장려금	▪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 다. 대리점법의 적용 제외 사유

» 다음의 각 경우에 있어서 대리점법은 적용 배제됨

-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
-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거래
-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

» 그러나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된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있음

## 2. 대리점법상 공급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 라. 공정거래법과의 적용 관계

- »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 » 대리점법상 금지행위의 유형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서 정하는 행위유형과 유사하며, 그 부당성의 판단기준이 유사함

### 가. 공급업자의 계약서 작성 의무

- »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 시기, 상품의 반품조건, 영업의 양도, 계약 해지의 사유 및 계약 해지 절차, 판매장려금 지급,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대리점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 »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나. 구입 강제 행위의 금지

-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됨

### 다.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됨

### 라. 판매 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됨

### 마.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됨

### 바. 경영활동 간섭 금지

-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됨



## 사. 주문 내역의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 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 내역의 정당한 확인 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됨

### 3. 주요 대리점법 위반 사례

#### 패션그룹형지(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22. 1. 18.)

##### ▶ 행위 사실 - (대리점법 제9조 제1호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 패션그룹형지 주식회사는 판매대행점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상품을 다른 대리점으로 운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판매대행점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함

##### ▶ 제재

→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재발금지명령)

→ 과징금 1억 1,200만 원

#### 대상트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21. 9. 15.)

##### ▶ 행위 사실 - (대리점법 제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 대상트코리아(주)는 대리점의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리점과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함

##### ▶ 제재

→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재발금지명령)

→ 과징금 1억 1,200만 원

### 4. 대리점법 위반 시 제재

제재 유형	내용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가 대리점법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li> <li>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li> </ul>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위반 금액의 최대 80%의 부과 기준을 곱하여 과징금 부과</li> </ul>
형사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리점법상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li> <li>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그 대표자 등과 함께 처벌</li> </ul>
손해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업자가 대리점법을 위반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li> <li>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구입 강제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분쟁조정 신청 또는 공정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 협조에 대한 보복행위를 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li> </ul>

## PART 6.

## 약관규제법 해설

### 1. 약관규제법 개요

#### 가. 의의

- »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
- » 거래 주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강행법규임

#### 나. 약관의 정의

- »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 » 약관이 되려면, ① 일방 당사자(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어야 하고(일방성), ②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일반성), ③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형식성) ④ 미리 마련된 것이어야 함(사전성)

### 2.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

#### 가. 의의

- »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함
-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함
- »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 나. 명시·설명 대상: '중요한 내용'

- » 약관규제 법상 명시·설명 대상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
- »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됨

- »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음

### 다. 명시·설명의 상대방

- »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함

### 라.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및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못하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함
- »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임
- »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3. 약관해석의 원칙

### 가.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 약정을 한 경우, 개별 약정이 약관에 우선함

### 나.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됨

### 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함

## 4. 불공정 약관

### 가. 일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 ① 의의

-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임
- » “공정성을 잃은”이란,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 사이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을 말하며,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 » 단,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됨

## ②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 사업자가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과 고객에게 부여된 이익을 비교衡量하여 판단함
- » '고객의 이익'은 고객 집단의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계약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
- » '부당성'은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관계 법령, 거래 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사업자의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③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 사업자가 통상적인 약관의 테두리를 벗어나 의외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의외성은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함

## ④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 '본질적 권리'란 그 계약유형에 특징적인 것으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중요한 것이면 충분함
- »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여부는 물리적 불능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회 통념상 계약 목적의 달성이 위태로운 경우도 포함됨

## 나. 면책조항의 금지(약관규제법 제7조)

- » 면책조항이란, 현재 또는 장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법규상 손해배상책임을 발생 원인과 범위에 대하여 유리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을 정한 약관조항을 뜻함
- »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임(약관규제법 제7조)
  -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 부당한 면책조항의 유형

- 민법상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입점 후 화재, 도난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
- 아파트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은 매매계약이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건축물 및 대지의 공급면적이 당초의 계약 면적과 달리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으로 민법상 대금 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등기 면적에 다소 증감이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매매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 매도인의 매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한 제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반품 또는 교환을 인정하는 조항

## 다. 부당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약관규제법 제8조)

-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임
-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 시 발생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 놓은 것을 말함. 지연손해의 배상·전보배상·위약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약관상 금전 지급이 실질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포함됨
- » '부당하게 과중한' 지의 여부는 거래유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 부당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유형

-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수준이 통상의 거래 관행임에도 총 분양대금의 20~30%를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임에도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도인 또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매수인 또는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한 조항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이 예정 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임에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외에 별도로 연체료까지 청구하거나 기납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라. 계약의 해제·해지권 제한의 금지(약관규제법 제9조)

-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임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지속적인 채권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 부당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유형

-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최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고객의 해제·해지 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에도 고객이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제·해지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관리상 필요에 의한 사업자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최고 등의 절차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고객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업자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으나 계약 물건의 반환이 불가능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반환할 경우 그 가액산정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로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 고객이 원상회복의무를 사업자보다 먼저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
-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 마. 채무내용의 일방적 변경 금지(약관규제법 제10조)

-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임
  -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임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 급부에는 사업자 자신이 제공하여야 할 급부와 고객이 제공하여야 할 급부를 모두 포함되며, 급부의 변경에는 약속한 급부의 수량, 성질, 이행 시기나 이행 장소의 변경, 급부제공의 방법 등이 모두 포함됨
- »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관계 법령, 거래 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고객과의 협의 가능성, 일방적인 변경 가능성, 사업자의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 부당한 급부내용 변경의 예시

- 상가임대차약관에서, “임대인이 상가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절차나 제한 없이 상가 건물 내의 각 층별로 지정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임차인에게는 이러한 업종변경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조항
- 택배회사의 위탁영업소계약에서 위탁수수료를 사정 변경에 따라 위탁자(택배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바. 고객 권리의 부당한 박탈 금지(약관규제법 제11조)

»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임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 고객 권리의 부당한 박탈 조항 유형

- 고객의 채무불이행 시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액의 과다 등을 이유로 이익을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객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사업자의 민·형사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익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의 이익을 박탈함이 타당함에도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

## 사. 의사표시의 의제 금지(약관규제법 제12조)

»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임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 ▣ 부당한 의사표시 의제 유형

- 고객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손해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음에도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고객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유형·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조항
-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발신만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하거나 연착이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고객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아. 대리인의 책임 가중 금지(약관규제법 제13조)

- »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임
-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무효·취소로 되는 경우 대리인이 그에 대한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
  - 고객이 약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리인이 그 이행 책임을 진다는 조항

### 자. 소송상 권리의 부당한 제한 금지(약관규제법 제14조)

- »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임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 5. 불공정 약관 주요 사례

#### 한국자산신탁(주)의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 (2021. 5. 6.)

##### ❖ 문제된약관

- 처리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공사의 부도 및 파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 신탁등기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 관련 약관규제법 조항

- (이의제기 금지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내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이의(소송) 제기 금지조항(약관법 제14조 제1호)
- (면책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약관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

##### ❖ 제재

-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사용 금지명령

#### 아고다의 환불 규정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 (2019. 2. 11.)

##### ❖ 문제된약관

- 고객이 사업자의 온라인 숙소 검색·예약 플랫폼을 통해 한 숙박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취소 시점 및 숙박 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환불 불가' 조건

##### ❖ 관련 약관규제법 조항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약관법 제8조)

##### ❖ 제재

-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한 사용 금지, 삭제·수정 명령



## 6. 위반 시 제재

- »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약관 조항은 무효임. 약관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임

### 가. 시정권고

- » 사업자가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해당 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나. 시정명령

-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 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가 시정조치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다수 고객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다. 벌칙

-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표준 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은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
- » 표준 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 약관 표지를 사용하였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

## PART 7.

# 공정거래 법규 위반과 개인의 책임

### 1. 서설

- » 최근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抑止力) 제고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규제 기관 및 사법기관을 중심으로 법 위반 행위를 실행한 개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 본 장에서는 회사의 공정거래 법규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행정적·형사적·민사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에 더하여,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형사적·민사적 책임에 관하여 살펴봄

### 2. 개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

####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행사 동향

-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은 공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기소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29조 제1항, 하도급법 제32조 제1항, 대리점법 제33조 제1항, 가맹사업법 제44조 제1항,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 제1항).
-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에는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만을 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법 위반 행위를 억지한다는 제재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고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예컨대 2003 ~ 2011년까지 9년의 기간 동안 고발 건수는 66건이었으나, 2018 ~ 2022년까지 불과 5년의 기간 동안 고발 건수는 무려 234건으로 연 평균 기준 무려 6.4배나 증가하였음
- » 이에 더하여 ① 2013년 도입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의무 고발요청 제도(공정거래법 제129조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고발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서 고발요청을 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개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나.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동향

- » 과거에는 개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더라도, 행위 자체가 행위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고려하여, 대체로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특히 입찰 담합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

- 건설사업자들이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각 사업자가 담당할 공구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건설사들이 구성된 컨소시엄 및 건설사들의 협의체의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찰 담합행위를 주도하였던 피고인 개인에게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노669 판결)
-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하여, 입찰 담합행위를 주도하였던 건설사의 공사 수주업무 담당 임직원으로서 4년의 기간 동안 입찰 담합행위에 관여한 개인 (3인)에 대해 10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8. 7. 24. 선고 2017노3605 판결)

## 3. 개인에 대한 민사적 책임

### 가. 개요

- »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발주처 등), 위반행위자인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 이에 더하여 회사 역시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되는 과징금액이 있을 경우 그 과징금액 상당액, 그리고 ②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상당액만큼의 손해를 입은 것이고, 이에 따라 회사 역시 위반행위를 직접 실행하였거나 이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나. 임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 최근에는 특히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원을 상대로 회사의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과징금을 납부함에 따른 손해를 입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관여 임원 개인’이 회사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관여 임원 10명에 대하여 1인당 최대 4억 9,5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 다. 일선 직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 위와 같은 임원 이외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실행한 ‘직원’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례 역시 확인되고 있음.
-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내 대학교가 발주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입찰 담합에 관여한 ‘SI팀의 팀장 및 같은 팀의 팀원’에 대하여서도, 회사가 과징금을 납부함에 따라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팀장의 경우 1,200만 원의, 팀원에 대해서는 800만 원의 각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1나48719 판결).

2024  
Compliance  
Program

**와이케이스틸(주)**